

# 사회적금융 활성화

2021.  
02.18(목)

13:30~  
16:00

## 정책 시행

## 5년 평가

### 토론회 프로그램

**발제 1. 이진호**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사회적금융팀장

**발제 2. 박종현**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방향  
|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 패널토론

- 좌장 김재구**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
- 패널 윤종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추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 하재찬**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 김영식**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 도현명**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현황 | 임팩트스퀘어 대표
- 이상진** 사회적 금융 제도개선 과제 |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 박학양**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 역할 | 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 사무총장
- 최혁진** 활성화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차례

	02	<b>프로그램</b>
축사	03	<b>홍익표</b>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기조발언	04	<b>송경용</b>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환영사	05	<b>윤관석</b>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위원장
	06	<b>민형배</b>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07	<b>민병덕</b>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08	<b>김기태</b> 사회적경제 비서관
발표	10	<b>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b> <b>이진호</b>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사회적금융팀장
	12	<b>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방향</b> <b>박종현</b>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20	<b>윤종태</b>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추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32	<b>하재찬</b>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다양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48	<b>김영식</b>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56	<b>도현명</b>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임팩트스퀘어 대표)
	60	<b>이상진</b> 사회적금융 제도개선 과제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66	<b>박학양</b> 도매기금과 사회적금융 생태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76	<b>최혁진</b> 활성화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21. 02.18(목)  
13:30~16:00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장

민병덕 국회의원

**SMS**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시간		내용	
13:00-13:30	30'	등록, 사전 안내	
1부- 기념행사 (13:30 ~ 14:00)			
13:30 ~ 13:35	5'	개회	국민의례, 주요 내빈 및 식순 소개
13:35 ~ 13:40	5'	축사	<b>홍익표</b>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13:40 ~ 13:44	4'	기조발언	<b>송경용</b>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13:44 ~ 13:51	7	환영사	<b>윤관석</b>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위원장
			<b>민형배</b>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b>민병덕</b>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13:51 ~ 13:55	4	인사말씀	<b>김기태</b> 사회적경제 비서관
13:55 ~ 14:00	5	break time	
2부- 토론회 (14:00 ~ 16:00)			
14:00 ~ 14:05	5'	여는 말	2부 진행 안내
14:05 ~ 14:15	10'	발제1	<b>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b> <b>이진호</b>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사회적금융팀장
14:15 ~ 14:30	15'	발제2	<b>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방향</b> <b>박종현</b>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14:30 ~ 15:40	70'	지정토론	좌장: <b>김재구</b>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b>윤종대</b>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추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b>하재찬</b>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다양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b>김영식</b>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b>도현명</b>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임팩트스퀘어 대표) <b>이상진</b> 사회적금융 제도개선 과제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b>박학양</b> 도매기금과 사회적금융 생태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b>최혁진</b> 활성화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15:40 ~ 15:55	15'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55 ~ 16:00	5'	폐회	마무리, 폐회

---

# 축사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실행 3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민형배, 민병덕,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해 주시는 사회적 금융 관련 기관과 학계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공 부분의 공급은 2017년 255억 원에서 2020년 4,207억 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2017년 2만2천여 개에서 2019년 2만7천여 개로 연평균 약 10%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 수 역시 2017년 25만 명에서 2019년 2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금융을 토대로 한 정부 주도의 자금공급 확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고 사회적 경제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금융이 태동기를 넘어 더욱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공공부문의 자금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경제 분야 성장에 따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금융의 판로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조달이 민관협력 및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을 통해 점점 더 민간으로 확산되어 건강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주요 입법 과제로 사회적 경제 3법이 발의되었고, 저도 그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3법 입법 추진 앞두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홍익표**

# 기조발언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함께 이번 행사를 주최해주신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금융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2018년 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 결실을 보았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도 이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 최초의 도매기금으로 그 첫 걸음을 뚫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현장의 노력이 쌓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간의 성과와 개선되어야 할 점을 돌아보고 앞으로 사회적 금융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문제, 기후위기 등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여러 노력들이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다양한 대안적 시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입법 노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통과를 통해 현재 여러 개별노력들이 구심점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질 뼈대 위에 살을 붙여나갈 후속 정책의 입안, 다양한 영역의 참여, 시민의 관심 그리고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도의 토대 위에 결국엔 사회적 경제 각 영역의 개별적인 노력들이 쌓여나아가야 하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규모화를 돕고, 새로운 혁신의 시도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급 통로를 만들어 민간과 공공, 수도권과 지방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거버넌스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지난 3년간 우리의 노력을 돌아보고 새롭게 마련될 사회적 금융의 제도적 토대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그 토대 위에 어떤 노력들을 쌓아갈지, 또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의 토론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송경용**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한국사회연대가치기금과 민형배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민병덕 의원실과 더불어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 3년, 평가와 과제>를 함께 짚어보는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은 중요한 가치가 ‘사람 중심 포용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가 가장 잘 이상적으로 구현된 모델이 다수 시민들의 협조와 공유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발전한 서구 선진 사회에서 시장경제 실패를 보완하는 중요한 기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 구현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공급하는 ‘사회적 금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2018년 초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민과 관이 협력하여 같은 해 말 국내 최초의 도매형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인 ‘한국사회연대가치기금’을 출범 시킨지도 어느덧 햇수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속도전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단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추구 과정에서 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신뢰의 구축이 성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는 사회적 금융, 나아가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익적 가치 구현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사회적 금융,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상륙한 것은 3년보다 훨씬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과 정부가 뜻을 모아 본격적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자리는 지난 3년 간 우리가 이뤄온 성과의 양적 크기를 놓고 평가의 잣대를 대기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목표한 바대로 뚜벅뚜벅 가고 있는지, 변화된 시대 환경 속에서 새롭게 설정해야 할 과제들은 없는지를 위주로 차분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 가치를 보다 두텁게 구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류 금융권에서 최근 ESG를 화두로 삼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큰 시대 흐름에 사회적 금융이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 바라며,

저 또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오늘 자리에서 나오는 논의들을 경청하고, 앞으로도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같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들의 입법에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윤관석**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민형배입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공동주최해주신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김영배 사회적경제입법추진단장님, 민병덕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을 발제해주실 이진호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팀장님과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방향을 말씀해주실박중현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8일,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자본조달 문제를 금융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21년 올해로 활성화 방안 발표 3년차를 맞이하여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하는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숫자 목표치 달성에만 연연하고 질적으로 정책의 효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 및 반성이 부족합니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정책을 평가한다면 한번 발표된 정책도 보완, 수정되면서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축으로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 전체의 고통 분담과 공동체 연대만이 위기 극복과 그이후의 번영까지도 가져온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증가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정부 재정을 넘어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해 자생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한 자만이 성공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금융 정책 지난 3년 평가는 앞으로의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있어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추진과 맞물려 사회적금융도 활성화 시킬 적기입니다. 오늘 주신 제안들을 저 또한 상임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고계신 현장의 많은 활동가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축년새해가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국회의원 **민형배**



---

# 환영사

‘2021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는 각자 도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서 다양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행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입법 추진과 사회적 금융의 제도화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발제 및 토론에 나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민병덕**

---

# 환영사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동주최를 맡아주신 윤관석 국회 정부 위원장님은 IMF 위기 당시 인천시의 실업극복 국민운동을 주도하셨고 사회적 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함께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사회적 경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회적 금융에 대한 토론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가뭄에 말라비틀어진 척박한 땅에서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땅을 일구기 위해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험한 일을 맡아 고생하시는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님께도 특별히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이 발표되고 민과 관이 적극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에 230억 원 정도 수준의 금융공급액이 2020년에는 5,700억 원으로 약 2,300% 증가했습니다. 대출 잔액 또한 1조 원을 넘어서 양적인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전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린뉴딜이나 사회주택과 같은 부분은 대규모의 장기 대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 정비나 충분한 민간기금의 마련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및 운영 그리고 출자·출연 등도 첫 발걸음을 떼기 전인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국민적인 이해와 동의, 참여가 높아져야 합니다. 또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함께 사회적 금융을 추진하시는 분들과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끌어내질 여러 의견과 과제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관련된 정책과 제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사회적 금융의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김기태**



---

발표 1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이진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사회적금융팀장



#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방향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년 시행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방향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년 개관(1)

- 2018년 2월 8일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 사회적금융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
  - 사회적금융의 본격적인 제도화 계기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기본 방향
  - 도매형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인 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의 촉매자로 활용
  - 금융 및 사회문제에 전문성 있는 소매형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해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 연결
  - 사회적금융 관련 사회·재무 성과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해 민간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 정부·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규모 및 채널 확대 등 선도적 역할 담당
  - 사회적경제 성장·발달을 위한 인력·판로·보조금 등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의 유기적 연계 강화 추진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년 개관(2)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 정책과제
  1.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 사회적금융 전용기금 조성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 도입
    -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2.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한 대출 확대
    - 신보·지신보 등을 통한 보증 확대
    - 임팩트펀드 조성 및 크라우드 펀딩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투자 확대
    - 신탁 및 새마을금고 등을 통한 협동·지역금융 역할 강화
  3.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 사회적금융 협의회 설치 등을 통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중개기관과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
    -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및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 세 흐름의 정책과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라는 목표와 관련해 적절하게 선정
  - 3년간 정책 실행도의 측면에서는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의 순서로 판단
- 이하에서는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지난 3년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간단히 모색해 보기로 함

## 활성화 정책 핵심 목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태계 조성'으로 보임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중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이 이 부분에 해당
- 생태계란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 의존하는 수많은 유기체들 사이에 작동하는 독립적인 체계
  - 숲 생태계의 구성요소들: 빛·온도·물·공기·토양 등 무생물적 요소,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살아가는 식물과 미생물인 생산자, 사체나 유기물 분해해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는 미생물인 분해자, 동물인 소비자로 구성
  - 생태계의 핵심 키워드들: 에너지 전달기관, 상호의존성, 다양성, 공생공락, 완결성, 지속가능성, 자연선택, 적자생존 등
- 사회적금융 생태계
  - 구성요소들: 법과 제도 등 인프라, 자금, 금융중개기관, 중간지원기관, 정부, 사회적금융 자금공급자(투자자), 사회적금융 자금수요자(사회적경제 기업)
  - 숲생태계의 구성요소들과의 대비 가능성?



## '생태계 조성' 에 성공했는가?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시도들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금융투자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핵심 구성요소들의 육성 및 양적 확대 지원
    -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정책자금 제도 등을 통한 자금 공급 확대, 신보·지신보·신협 등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중심으로 촉매자본 제공 및 금융중개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및 지원이 구체화되기 시작
  - 민관 협력 속에서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토대 확립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 생태계의 본질적 특성 및 핵심 키워드 차원에서는 개선이 필요
  - 에너지 전달기관,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적자선택 메커니즘의 측면

## 에너지 전달기관의 측면

- 숲 생태계가 자기완결성을 띠며 풍성하고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
  - 숲이 햇빛을 흡수해서 태양 에너지가 시스템 외부로 방출되기 이전에 반복적 순환을 통해 여러 번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이 높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필요하고, 식물과 미생물과 동물들 사이의 먹이사슬 고리가 잘 작동하는 것이 필요
- 경제발전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작동
  -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잘 충족시켜주는 가운데 시장이 확대되고 상호 수요도 증대
    - 이게 바로 유용성과 가치의 창출이고 승수효과이며 경제발전이고 지역순환경제의 이상적 모습:
- 사회적금융 생태계에도 이러한 순환고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
  -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에 여러 층위의 다양한 집단들이 공생공락하고 있는가?
  - 다양한 사회적금융 관련 조직들이 자금수요 주체(=사회적경제 사업체)와 자금공급 주체(=사회적 투자자) 사이의 거래를 얼마나 활발히 성사시켜주고 있는가?
- 그 핵심은 금융이라는 업의 본질에 충실히 고유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Finance and the Good Society>의 저자인 Robert Shiller 교수에 따르면, 금융의 본질은 자금수요 주체에 대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조물 제공(goal architecture)+자금공급 주체에 대한 맡긴 자산의 보호 및 후견(stewardship)+양자 사이의 계약의 성사 및 관리(dealmaking)

##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의 측면

-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투자자의 확대 및 금융중개기관의 확충이 핵심 관건
- 사회적 투자자는 공공투자자·자선투자자·영리투자자·당사자투자자·시민투자자 등으로 구분
  - 이들은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에 대한 자금 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수익 그리고 이러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나름의 판단에 근거해 사회적금융의 공급주체로 참여하는데, 투자 목적·기대 이익·위험 감내도가 서로 상이
  - 이들이 골고루 필요하며, 특히 시민투자자의 힘이 가장 센데, 아직까지는 공공투자자와 자선투자자 중심
- 공공투자자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대규모기금을 조성해 촉매자본을 제공하고 법·제도 인프라도 마련
- 민간 공익재단 등 자선투자자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촉매자본 및 초기자본 등의 마중물을 제공
- 영리투자자는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데, 개인자산가·연기금·전통적 금융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
  - 낮은 기대수익과 높은 예상위험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지만, 일단 유입이 가능할 경우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투자자들
- 당사자투자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사업상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자조자금을 만들어 운영
- 시민투자자는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면서 금전적 자본 제공을 통해 그 활동에 동참하거나 후원하려는 투자자들
  - 높은 금전적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높은 위험까지 감내하지는 못하는 사람들로써, 이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수만 있다면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투자자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다양성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다양성도 대단히 중요
  - 사회적 투자자와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의 목적이나 성격은 다양하며, 그들의 필요도 다종다양함. 그러므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도 여러 유형으로 다변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이 점에서 전통적인 대출중심 중개기관에 더해 유가증권 중심 임팩트투자자 출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 사업 아이디어와 자금수요가 있고 거기에 대응한다는 게 대출방식의 전통적 사회적 금융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플레이어와 사업모델을 발굴해 사업을 성사시키자는 게 임팩트투자라는 비교도 어느 정도 가능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팩트투자자 유가증권·자본시장 흐름의 특징인 극단적 수익성 추구나 리스크 감수 등의 폐해로부터 제어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의 지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적 사회적금융과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은행모델의 쇠퇴 이야기도 있지만, 예금금융기관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는 여전히 큼. 이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특화 단체신협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관건인 당사자투자자 및 시민투자자들에 게 그들의 가치와 윤리와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사회가치연대기금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적자선택 메커니즘 측면

- 숲 생태계에서는 자연선택에 의한 적자생존 메커니즘이 작동
  - 각 개체들 사이의 생존 및 유전자 전파를 위한 경쟁 및 협동 속에서 적합한 개체가 선택되고 전체 생태계의 항상성이 유지
- 사회적금융에서는 어떤 적자 선택 메커니즘이 작동하는가?
  - 더 나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나 프로젝트를 찾아내서 지원하는 좋은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선택되고 발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사회적금융 생태계 내에 작동하는가?
  - 사회적금융기관들은 더 나은 가치의 제공을 놓고 경쟁하되 이를 위해 서로간에 그리고 여타 기관들과 협력을 효과적으로 벌이고 있는가?
    - 아직까지는 협동에 더 강조점을 두되, 경쟁의 측면도 주목해야
  - 이러한 과제들과 관련해서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같은 도매형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양과 질 측면에서 풍성해야 하는데,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
- 한편,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잘 작동하는 적자선택 메커니즘이 중요한데, 그 핵심 기제 중 하나가 사회적금융의 역할
  - 지난 3년간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에 대한 선택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

## 제도화의 측면

- 제도화란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적 인정 그리고 법과 제도에 의한 지원 및 규율을 뜻함
  - 따라서 사회적금융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회적금융의 가치와 공익적 역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금융은 금융의 본질에 충실하되, 금융의 힘을 발휘해 공동선의 달성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 금융임
  - 이 점에서 사회적금융의 제도화는 전통적 금융의 원리에 반하는 관제금융이나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같은 것이 아니라 금융이 사회의 발전 및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 다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금융의 실천은 금융업 전반의 바람직한 기풍(ethos)을 진작할 것이며, 금융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기회를 전통적인 금융에도 제공할 것
  -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 금융과 공공, 우리 사회 전반을 향해 전해야 할 메시지이자, 사회적금융 참여자들도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마음가짐
- 사회적금융의 참여자들에 거는 기대
  - 금융의 본질과 목적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직업적 보람을 느끼며, 그 기풍을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참여자들에 전파하고 시민 사회에도 널리 알리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 제도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지나친 중앙정부 주도로 인해 민간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의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약화되고 역량 구축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장 환경 관련 제도를 만들고 초기 자금 투입 등을 통해 시장조성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성공한 경제에서 항상 확인되는 당연한 역할이며, 사회적금융 제도화는 금융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새로운 규칙 설정이자 공공투자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
  - 정부 주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 설정보다는 중앙과 현장 사이의 관계 설정의 시각이 더 바람직
- 이때의 바람직한 방향은 목적과 목표는 중앙 차원에서 설정하되 그 목표 설정과정에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당사자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목표를 구현할 수단은 현장과 지역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현장에서 이뤄진 결정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피드백이 상시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현장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중앙 차원의 대담한 목표 설정과 강력한 추진을 통해 사회적금융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국가적 차원에서 큰 동력을 얻어 빠른 시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지방 차원에서 실행기관들의 전문성과 주도성이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연성 정보들과 국지적인 지식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중앙과 현장 사이에 효과적인 협력관계가 세워지고 정보가 충분히 흐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중앙의 사회가치연대기금과 현장의 다양한 금융중개기관들의 역할이 특히 요구

## “목적은 크게, 수단은 작게”

- “목적은 크게, 수단은 작게(Big What, Small How)”라는 Eric Liu와 Rick Hanauer의 슬로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목적은 크게(Big What) 또는 원대한 목표 설정
  - 국가적 의제를 설정할 때는 목표는 최대한 높게 설정하고 도약판에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투자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
  - 목표가 가져올 바람직한 결과를 설정하고, 그 결과의 도덕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필요. 정부와 중앙이 해야 일은 목표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친(親)사회적 경주가 펼쳐지도록 시동을 거는 것
- 수단은 작게(Small How) 또는 쉽게 실행가능한 수단들의 제공
  - 목표를 달성할 수단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중앙의 몫을 줄이고, 시민과 현장의 몫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
  - 새로운 국가적 프로젝트가 힘을 얻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특히 중요하며, 그러려면 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민간의 자율성이나 주도성 약화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현장의 권한 강화와 시민 참여의 확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
  - 시민실험이나 사회적은행의 실험에 더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금융 관련 시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실화

## 목적이 다른 금융들이 있다

-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의 통찰에 따르면, 인간의 경제적 삶에는 물질생활-시장경제-자본주의의 세 층이 중첩
  - 1층의 물질생활은 유구한 세월 동안 되풀이되어 일상적 습관처럼 되어버린 삶의 요소들로 가족을 중심으로 영위되는 자급자족과 사용가치의 세계
  - 2층의 시장경제는 교환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로 다수의 행위자들 사이에 경쟁의 힘이 작용해 이익이 일정하며,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행위자들이 대체로 잘 아는 투명한 영역임
  - 3층의 자본주의는 소수의 거상들이 술수와 힘을 휘두르고 법규와 규범을 우회하며 높은 이익을 독차지하는 반(反)시장의 공간
- 각각의 층위에서는 해당 활동의 성격에 부응하는 금융의 존재를 필요로 했음
  - 1층에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웃이나 교회 등에 의해 구휼 활동이 이뤄지거나 이자 없이 식량을 빌려주는 방식이 작동
  - 2층의 시장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메우기 위한 단기자금이 제공. 중세 도시의 작은 은행들. 이 경우에는 미리 약정된 보통 수준의 이자가 제공
  - 3층의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모험적 투자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금융이 제공. 거액의 이자나 성과 배당 방식

## 목적이 다르면 지원방식도 다르게!

- 각각의 층위에서 수행되는 금융 활동은 금융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그 목적이나 성격은 아주 다름
  - 3층에서의 작동하는 금융의 원리가 1층에도 관철된다면 물질생활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반대로 1층에서 관철되는 금융의 원리로는 자본주의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곤란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중세 시대에는 이 세 층들 사이에 칸막이를 치고, 특히 윗층의 원리가 아래층으로 전파되어 안정성을 해치고 규범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예방하는 데 큰 공을 기울였음
-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의 사회적금융 생태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긴급생계자금의 금융적 원리보다는 사회보장 성격이 더 강한 반면, 대규모 사회문제 프로젝트 지원은 높은 위험을 수반하고 거액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모험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높은 수익을 보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
  - 서민의 긴급생계자금 지원(미소금융)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상적인 자금조달 지원(소상공인 대출)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회문제 해결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임팩트투자)들은 목적·성격·원리 면에서 차이가 큼
  - 따라서 이 세 영역의 금융활동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원리들에 기초한 지원·관리·평가 등이 필요함

---

토론 1

#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

2021.2.18

## 사회적 금융

### ➤ 금융

- 금융의 의미
- 생애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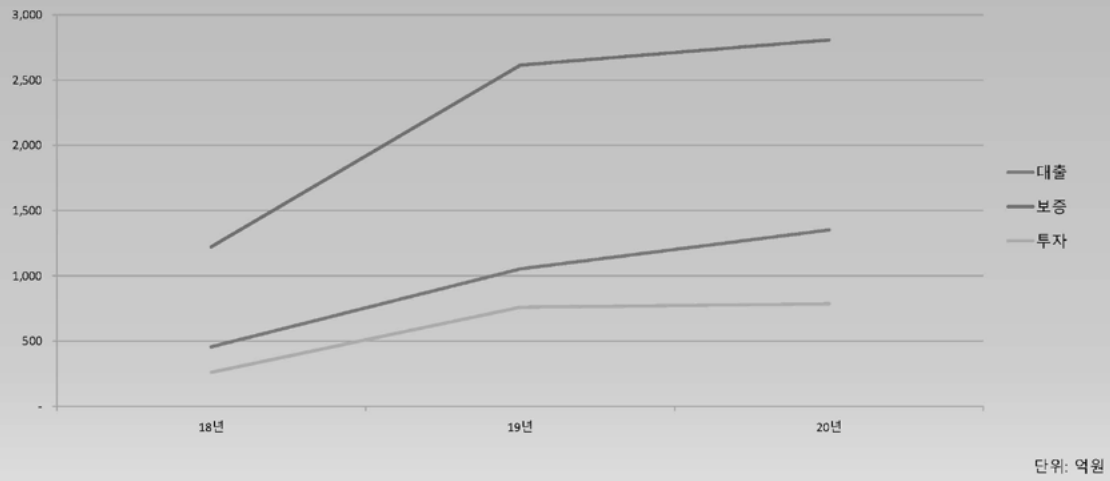
### ➤ 사회적 금융

- 사회적 가치

### ➤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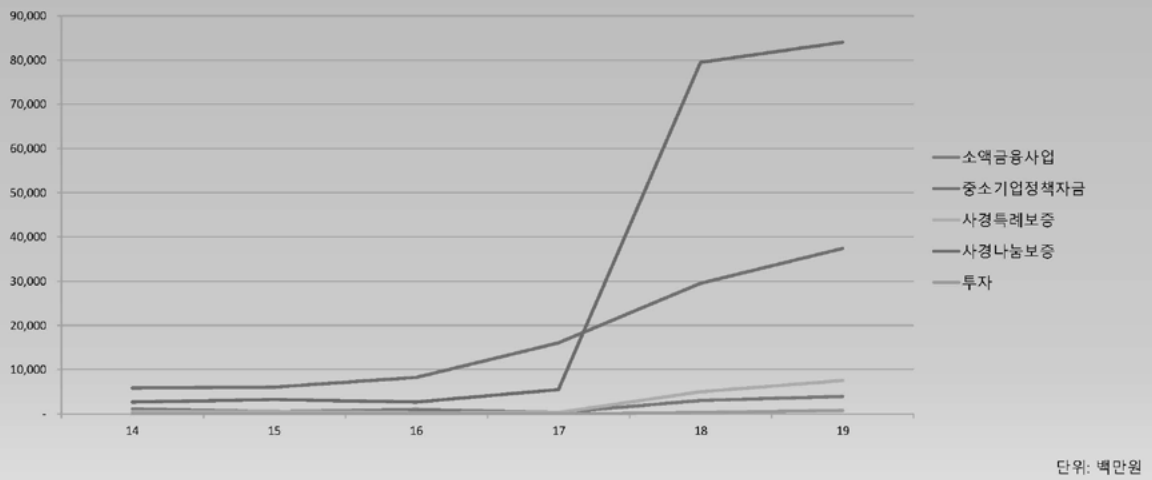
## 사회적 금융의 확대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 현황(대출, 보증, 투자)



## 사회적 금융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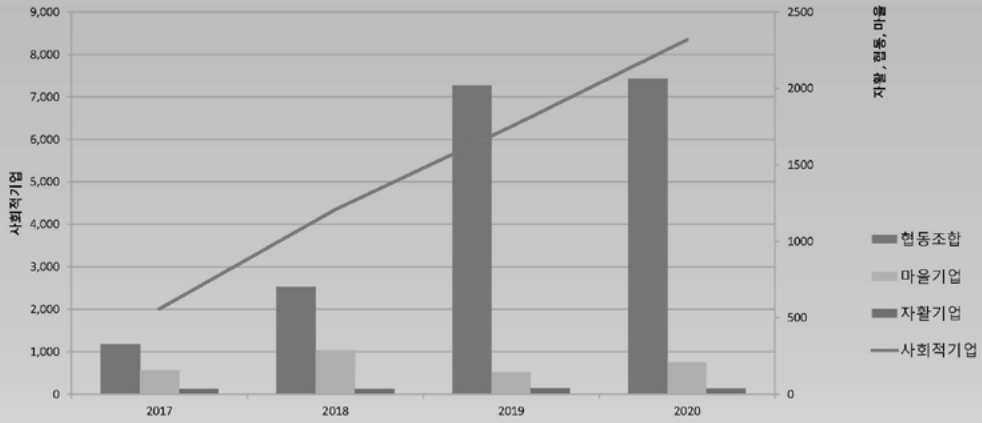
정책자금 연도별 활용 현황 (소액금융, 정책자금, 보증, 투자)





## 사회적 금융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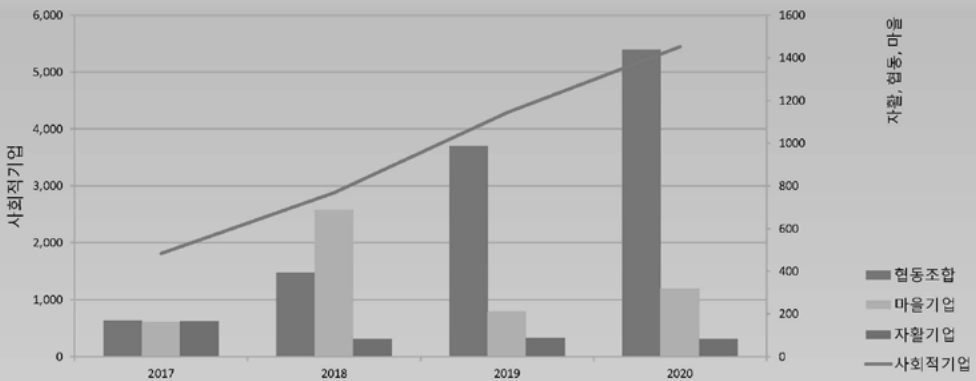
은행권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 유형별 지원 실적(잔액)



단위: 억 원

## 사회적 금융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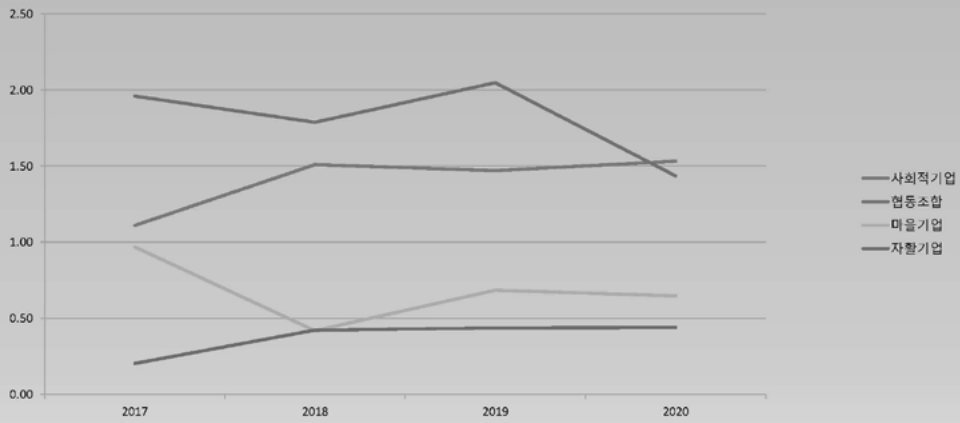
은행권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 유형별 지원 건수



단위: 건수

## 사회적 금융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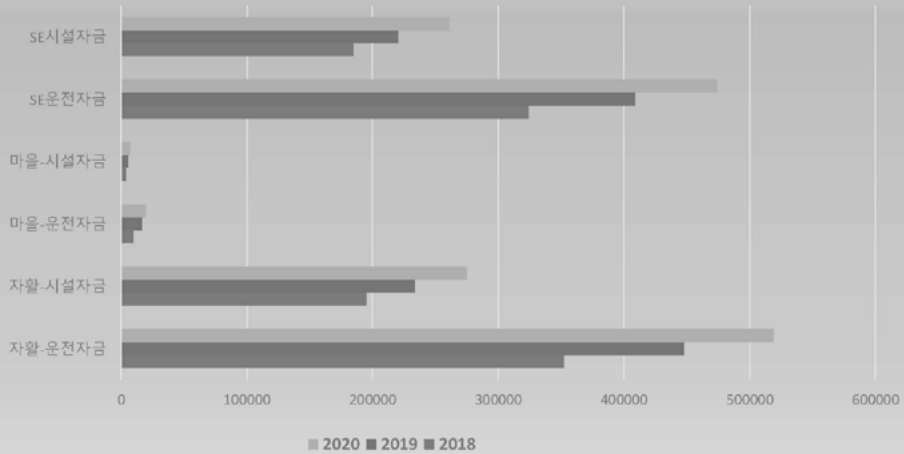
은행권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당 평균 지원 금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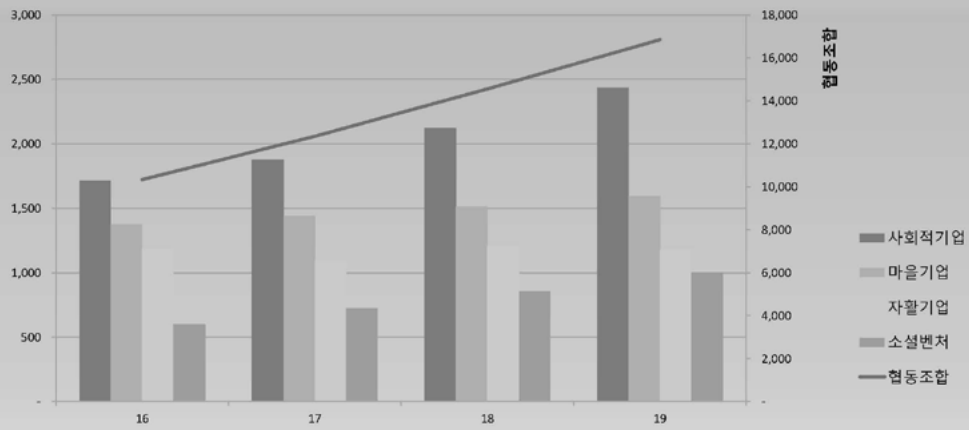
##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추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신용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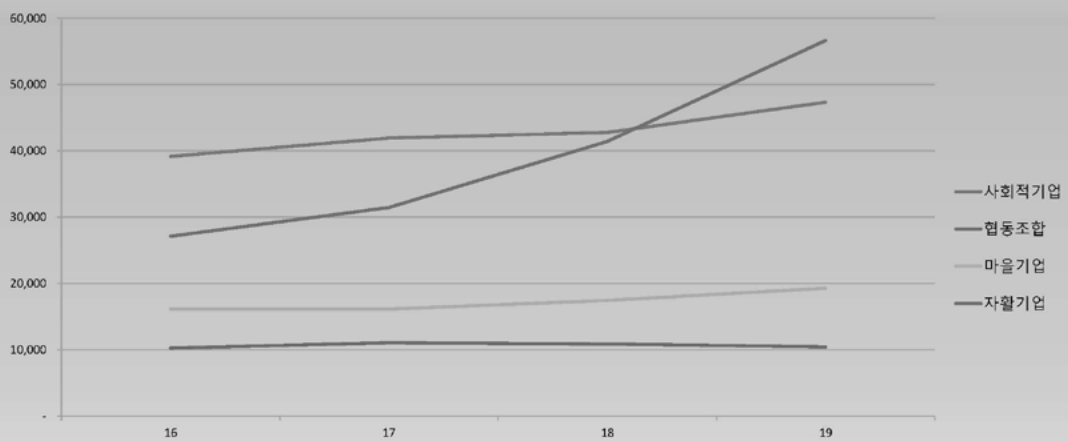
## 사회적 경제의 성장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수



## 사회적 경제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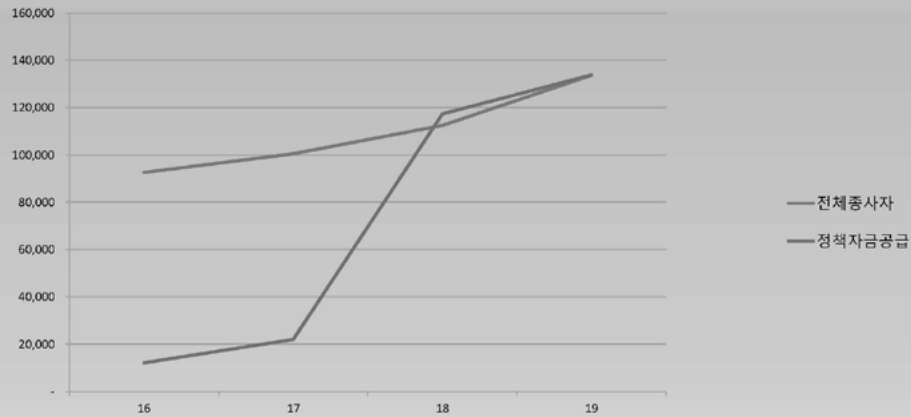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 기업의 종사자 수



##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

사회적 경제 기업의 종사자 수와 정책자금 공급

(조사의 어려움 (공개, 통제변수 문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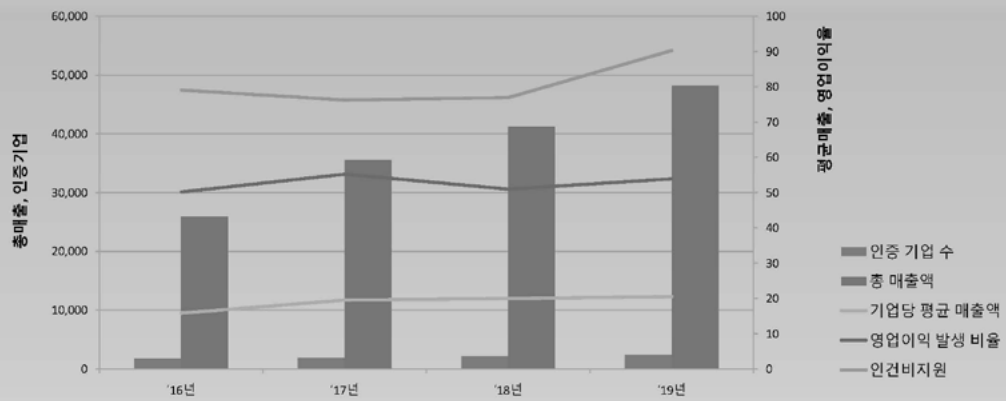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의 성장 추이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발표(연도별)에 의한 정확한 자료의 분석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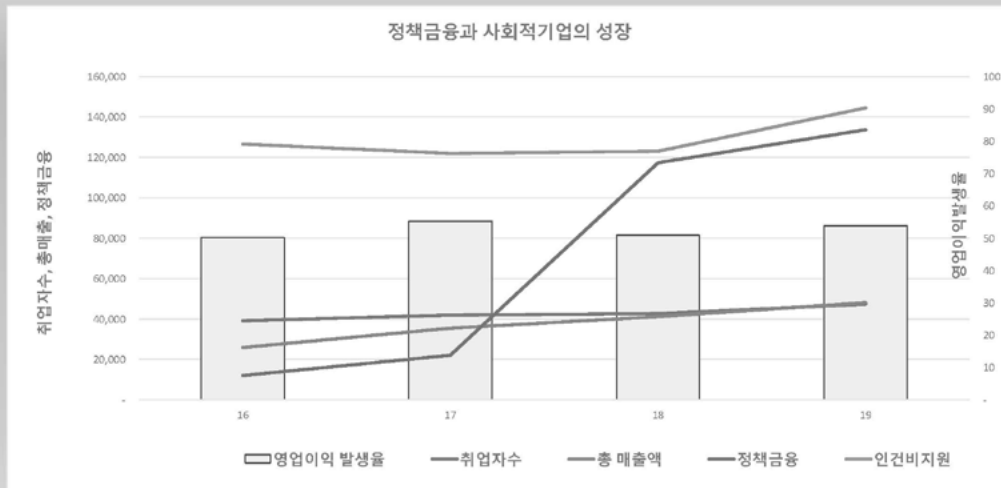
	'16년	'17년	'18년	'19년
인증 기업 수	1,713	1,877	2,122	2,352
총 매출액	25,963	35,530	41,175	48,170
기업당 평균 매출액	15.8	19.5	20	20.5
영업이익 발생 비율	50.2	55.2	51	53.9
전체종사자	39,165	41,917	42,742	47,322

출처: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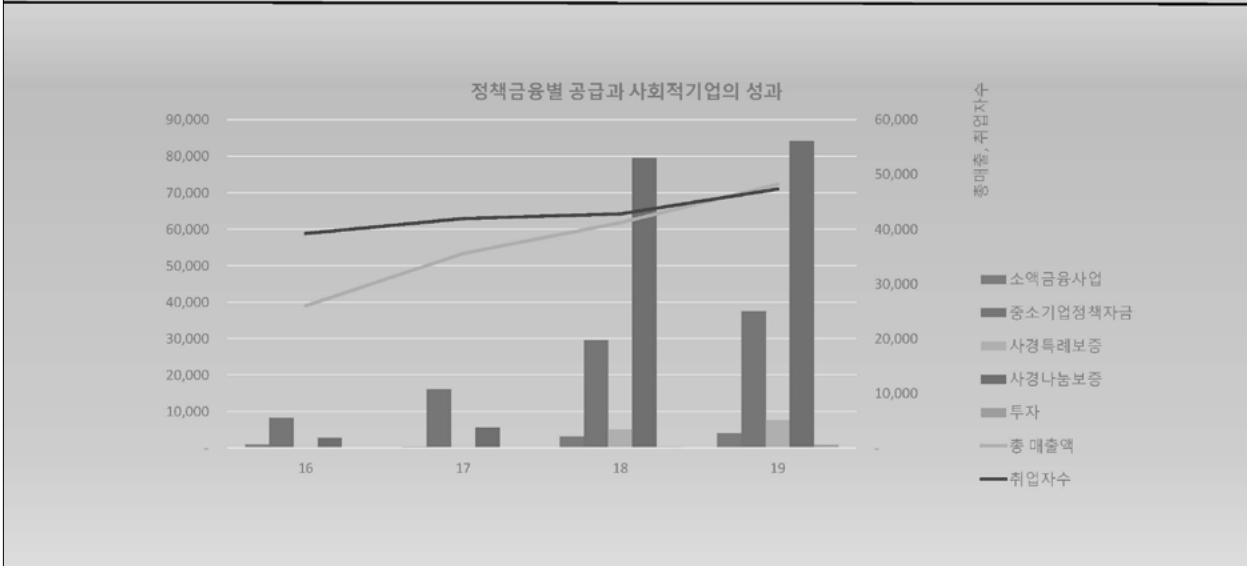
## 사회적 기업의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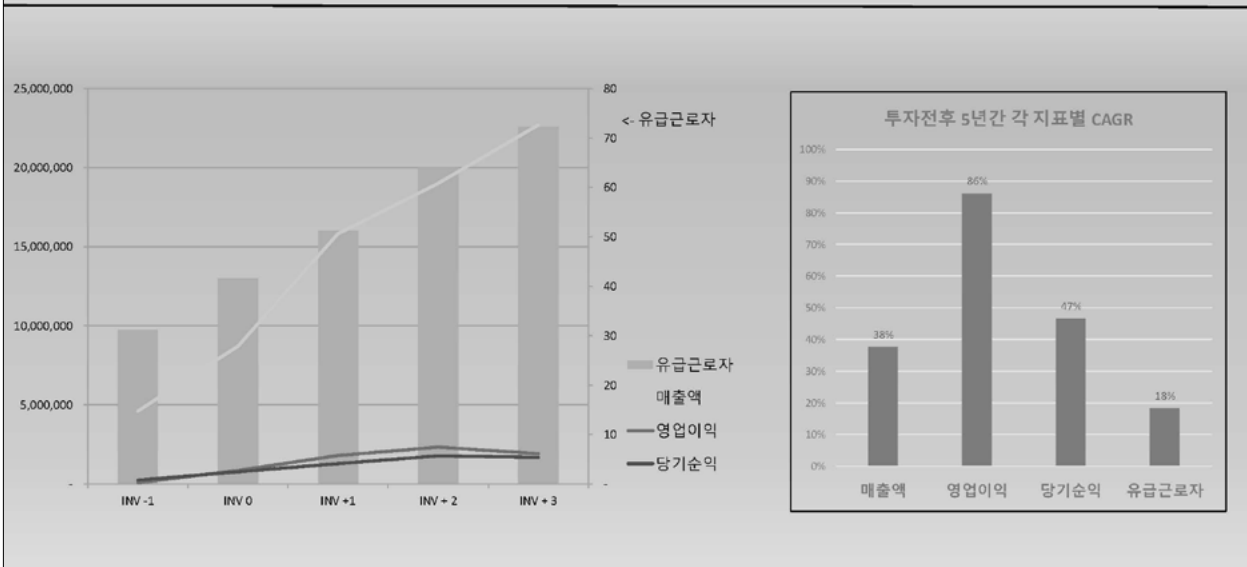
## 정책금융 공급과 사회적 기업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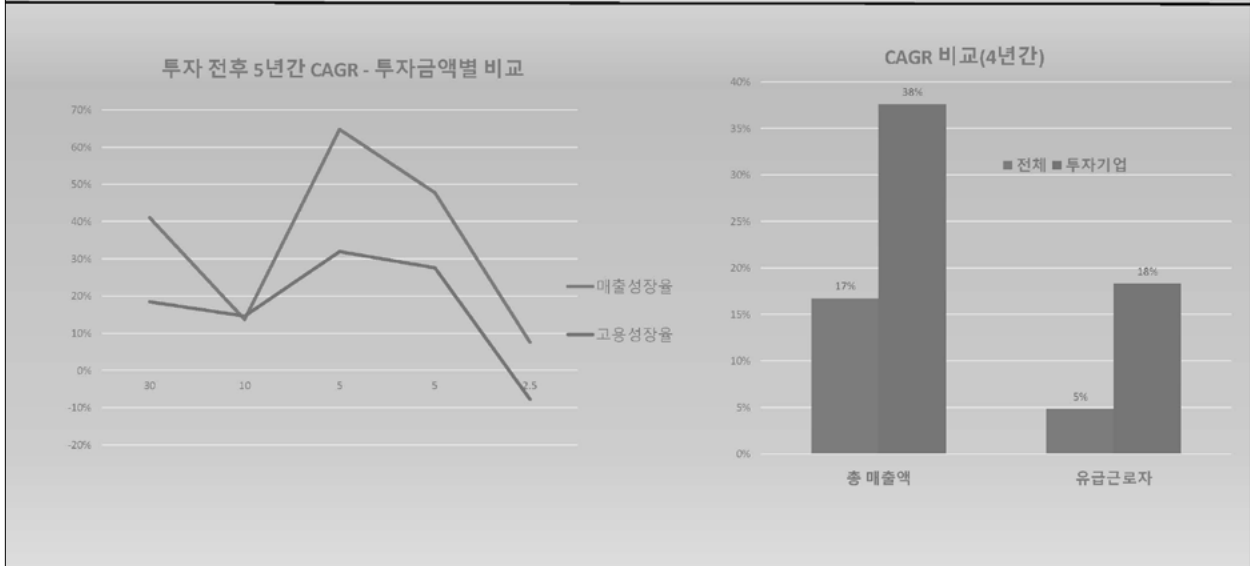
## 정책금융 유형별 공급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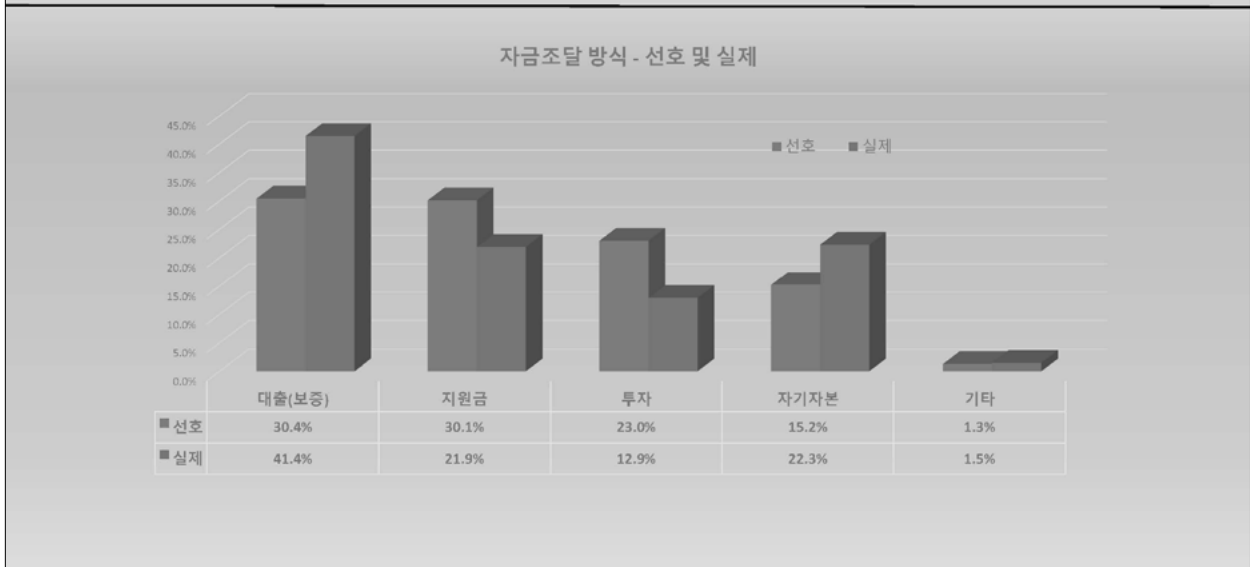
## 모태/임팩트 펀드 투자 기업의 성과(투자 전후 5년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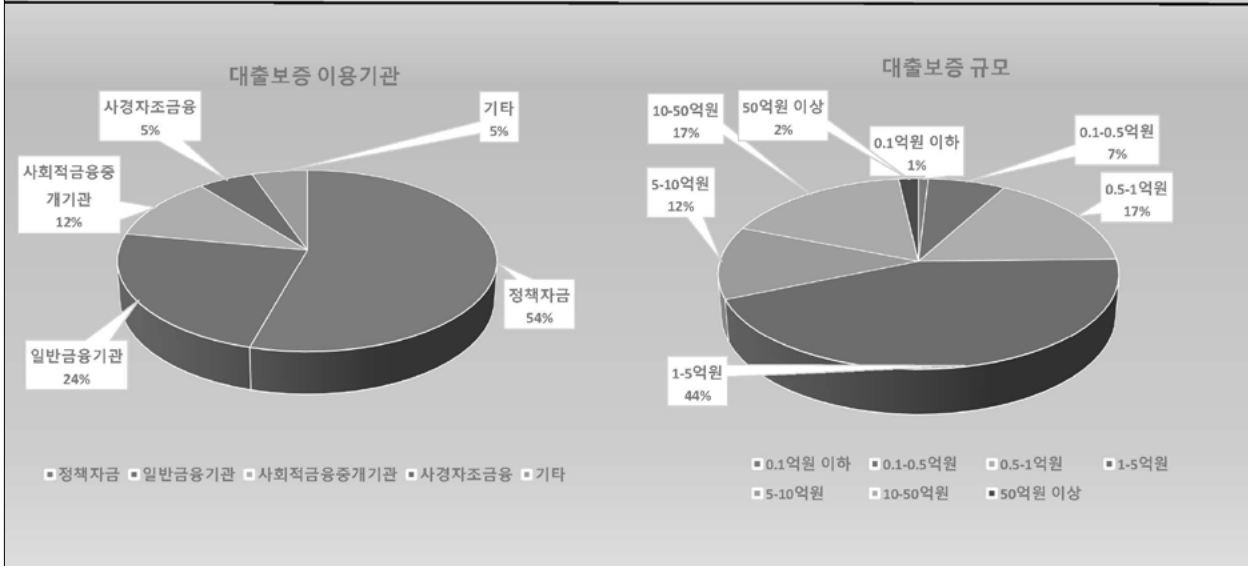
## 모태/임팩트 펀드 투자 기업의 성과(투자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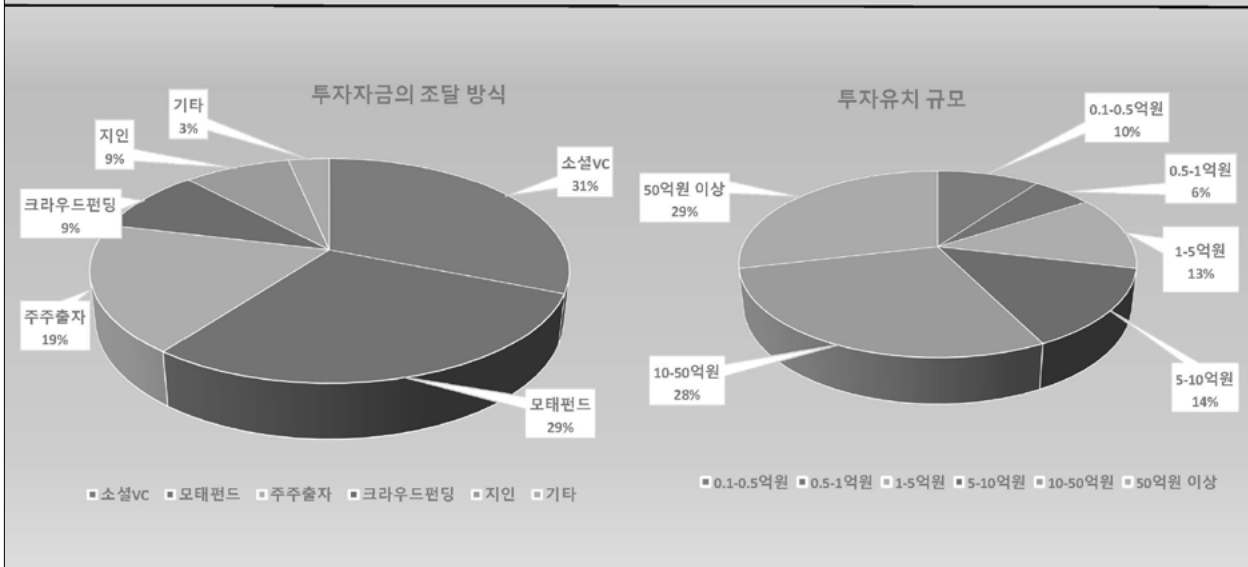
## 사회적 금융 강화 조사 결과 - 자금조달 방식



## 사회적 금융 강화 조사 결과 - 대출(보증) 이용 현황



## 사회적 금융 강화 조사 결과 - 투자 자금 조달 현황





---

##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현장 의견

- 사회적 금융 정보 공급과 접근성 확대, 인식 개선
- 사회적 금융 편중의 극복과 다양성 회복
- 사회적 경제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투자 전략 필요
- 임팩트 워싱의 경계
- 인내자본의 공급 확대
- 사회적 금융에 사회적 가치의 반영 확대
- 사회적 기업의 등록제와 가치평가, 법인격 도입 이슈

#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조기반 확보를 위한 사회적은행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평가와 과제

##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조기반 확보를 위한 사회적은행



2021. 2. 18.

하재찬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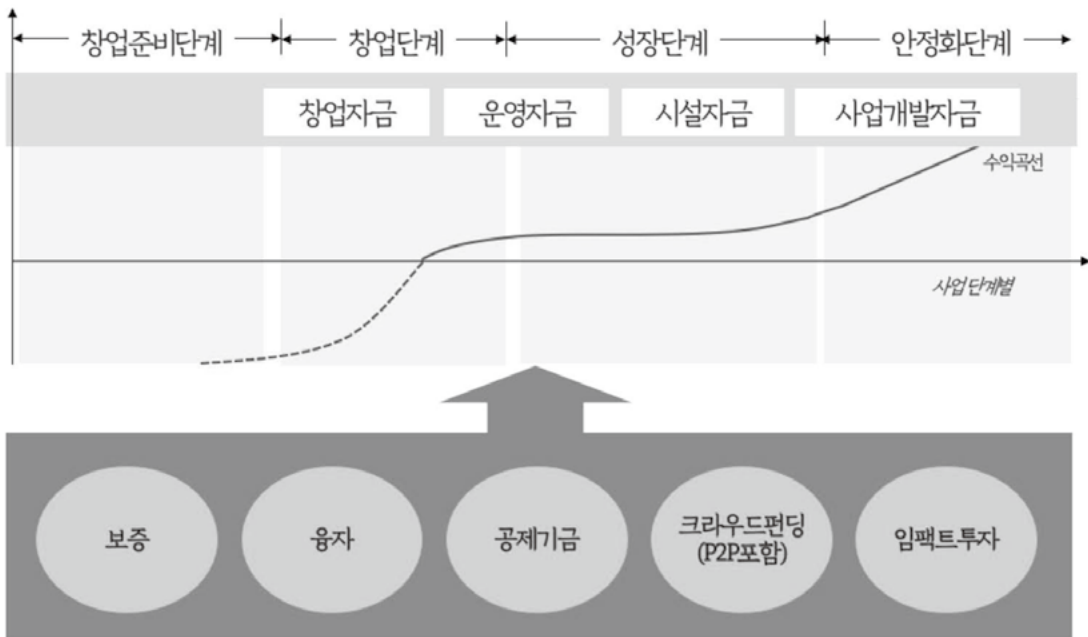
### 목 차

- I. 토론에 앞서  
자본의 조달(경로)와 경영 시스템의 중요성
- II.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대한 현장과의 고민
- III. 우리 생태계에 필요한 금융저수지(공급주체) 관점
- IV. 우리 스스로의 문제 해결 경로 관점  
자조 > 공제 > 실험 > 사회적은행
- V. 사회적가치 투자 리스크에 대한 관점  
비가시적/장기적 인 '사회적가치' 투자가  
가능한 담대한 의사결정 구조 필요
- VI. 정리 및 제언  
사회적경제 현장이 협동금융을 위해 자금을 모으  
고 우리 스스로를 담대히 지원하여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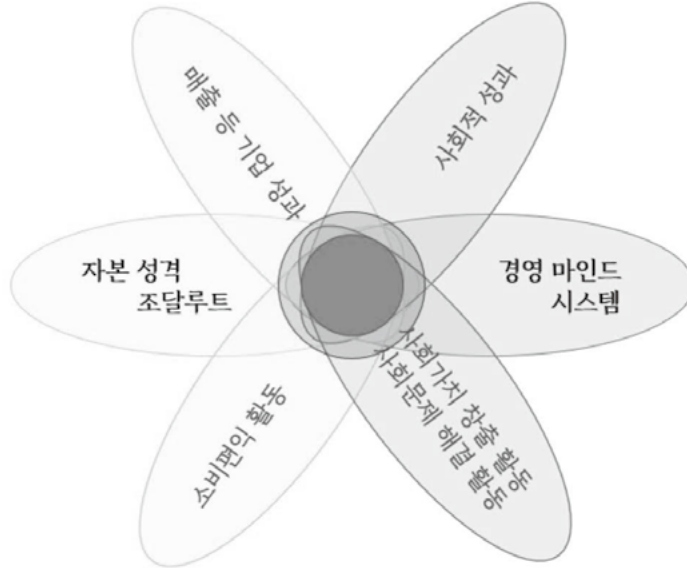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토론에 앞서  
자본의 조달(경로)과  
경영 시스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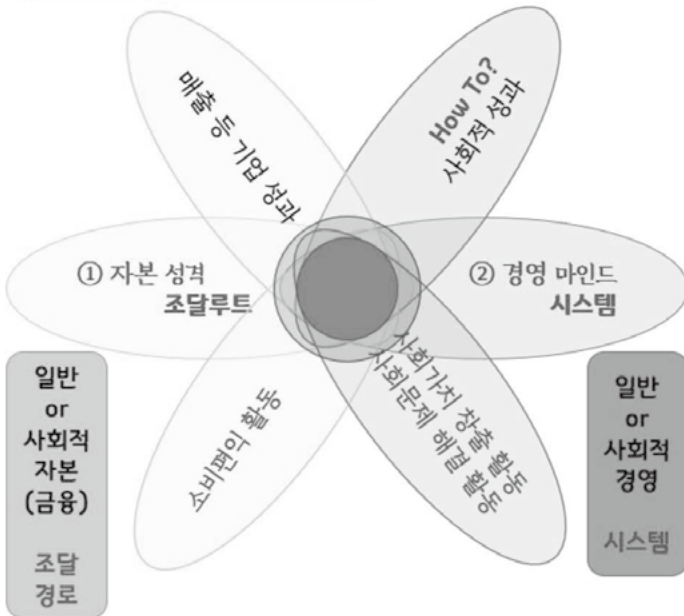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필요



사회적경제 기업  
통합성의 중요성



사회적경제 기업  
통합성의 중요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각 단계별 다양한 사회적 금융과 그것을 조달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 자금 조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 및 강화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인다.

장원봉 선생은 사회적경제를 1)사회적목적, 2)사회적소유, 3)사회적자본 이렇게 3가지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사회적경제 다뤄진다고 했다.

이 세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적 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다. 어떤 한 요소는 다른 두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사회적자본 중 금융자금은 가장 강력하게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소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 제가 사회적경제를 하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얼마나 통합적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결성이나 통합성이 없이 분절적인 것에 사회적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사회적이기 위한 통합성/일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창업취지와 목적의 중요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이어야 그 성과에 집중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총출한 시장경제 속 같은 위기에 그 창업취지와 목적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자본주의 속에서 열악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에서 사회적경제 다운 위기 극복을 위한 손에 피 나도 죽고 그 취지와 목적을 붙들고 있어도... 결국 자신의 부족함이라며 포기하는 사회적기업가를 볼 때이다.

또 30%이상 (노동/경제) 취약계층인 동료들의 생존과 연결된 조직의 생존 문제 속에서, 사회적 금융의 자금이 아닌 일반 금융자금을 활용하며, 그것에 의해 그 동안 애써 구축해 왔던 사회적인 경영 시스템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볼 때이다. 혹은 대포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기업이 단계별로 사회적 자금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을 적절히 조달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동부들이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대자본에 지배당하고 비환경적 농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현장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생태계와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사회적 경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대한 현장과의 고민


##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대한 현장과의 고민

사회적경제기업(개) · 종사자 수(명)

	2017년		2018년		2019년	
	기업수(개)	취업자(명)	기업수(개)	취업자(명)	기업수(개)	취업자(명)
협동조합	12,356	31,438	14,550	41,422	16,846	56,609
사회적기업	1,877	41,917	2,122	42,742	2,435	47,322
마을기업	1,442	16,101	1,514	17,438	1,592	19,261
자활기업	1,092	11,029	1,211	10,849	1,176	10,441
계	16,767	100,485	19,397	112,451	22,049	133,633

자료 : 기획재정부(2020). 사회적경제 기업 수, 취업자 수

- 2017년 이후 사회적경제 기업 연평균 약 10% 증가 종사자수 약 연평균 5% 증가하여 2019년 12월 현재 22,049개 기업에 133,633명이 일하고 있다. 여기에 생활협동조합(생협 조합원 140만세대)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장 밀도와 욕구 또한 매우 다양해졌고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 이에 사회적금융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현장 인터뷰와 함께 사회적금융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진행하게 되었다. 2020년 상반기 학습모임과 사회적금융위원회 4회 논의 및 금융 중개기관 별도 논의 2차례 등을 진행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대한 현장과의 고민

43명의 인터뷰 결과

“기존 지역금융기관은 지역 사회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지역A 협의회 및 다수 지역

“기존 대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실적을 쌓기 위해 신규 대출을 늘리려고 한다.”



지역B 중간 조직 담당자

“사회적가치에 관심 있다는 금융 기관과 사회적 경제를 위해 여러 차례 협력을 제안했으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였다.”



지역C 협의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확장하는 것이 미션인 은행이 있어야 보다 강력한 우리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음.”



부문 협의회 관계자

“협동조합은 자금조달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행을 고민했고,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



협동조합 관계자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은행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

“사회적 은행은 사회적 금융인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주제이며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함”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정부의 인증/인가제도를 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고 명확히 하고 집중하여 육성하고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 필요”



지역D 협의회 관계자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우리 생태계에 필요한 금융 저수지(공급주체) 관점

❖ 본 자료에 제시한 도식은 개념도가 아니며, 단순한 논리 전개를 위하여 토론자 개인이 임의로 그린 것입니다.

### 금융 주체와 지원방식

#### 보조금(무상지원)

- 크라우드펀딩(보상형)
- 정부 지원사업

#### 보증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융자

- 시중은행, 농협은행(금융권)
- 단위 신협 등(금융권)

#### 임팩트투자

- 크라우드펀딩(증권형)
- 임팩트투자회사

정부

개인

대자본  
(기업)

복지  
(사랑의열매)

일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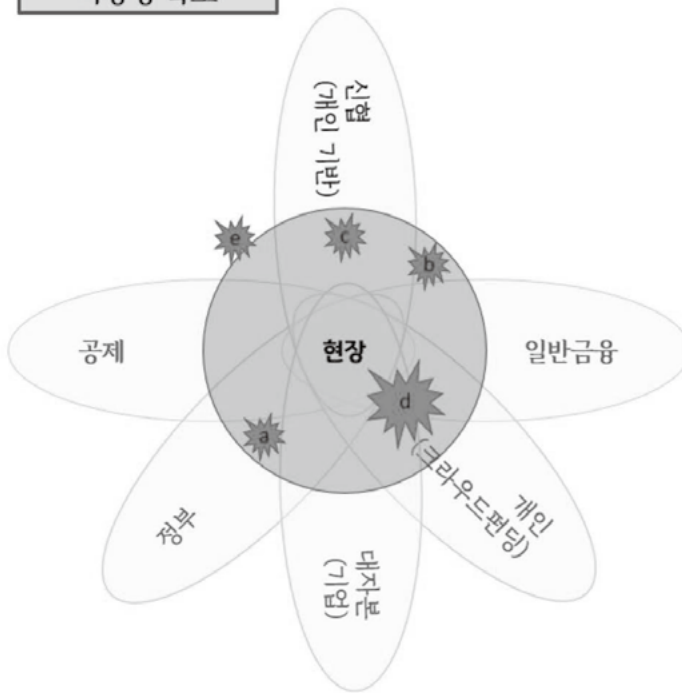
공제  
(사회적경제 기업)

신협  
(개인기반)

사회적은행



금융 주체 관점  
다양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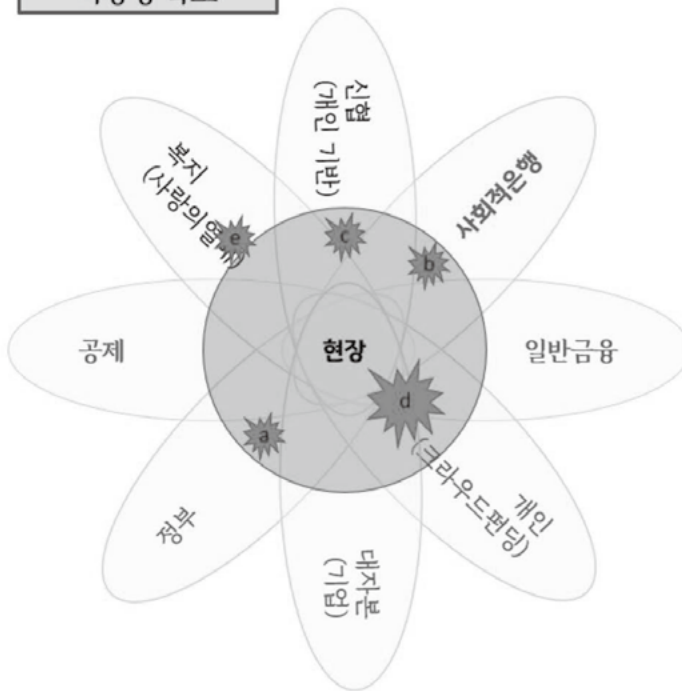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현장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주체(저수지)를 다양화  
필요

- a. 정부지원 외 지원 어려움
- b.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 존재하지만 활용할 금융 부재
- c. 신협 외 지원 어려움
- d. 3가지 지원이 가능하나...
- e.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주체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 주체 관점  
다양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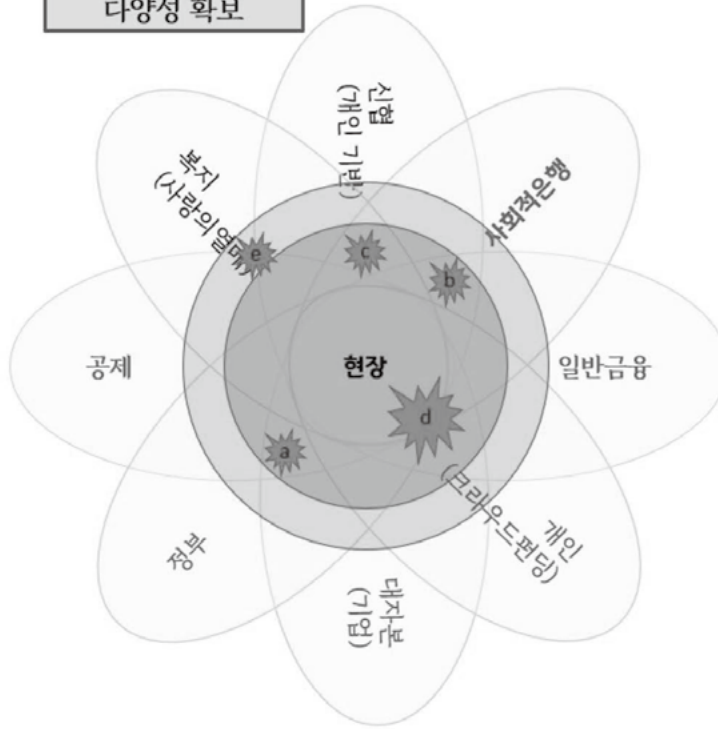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현장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주체(저수지)를 다양화  
필요

- a. 정부지원 외 지원 어려움
- b.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 활용할 금융 발생
- c. 신협 외 지원 어려움
- d. 3가지 지원이 가능하나...
- e.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주체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 주체 관점  
다양성 확보




사회적경제 현장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주체(저수지)를 다양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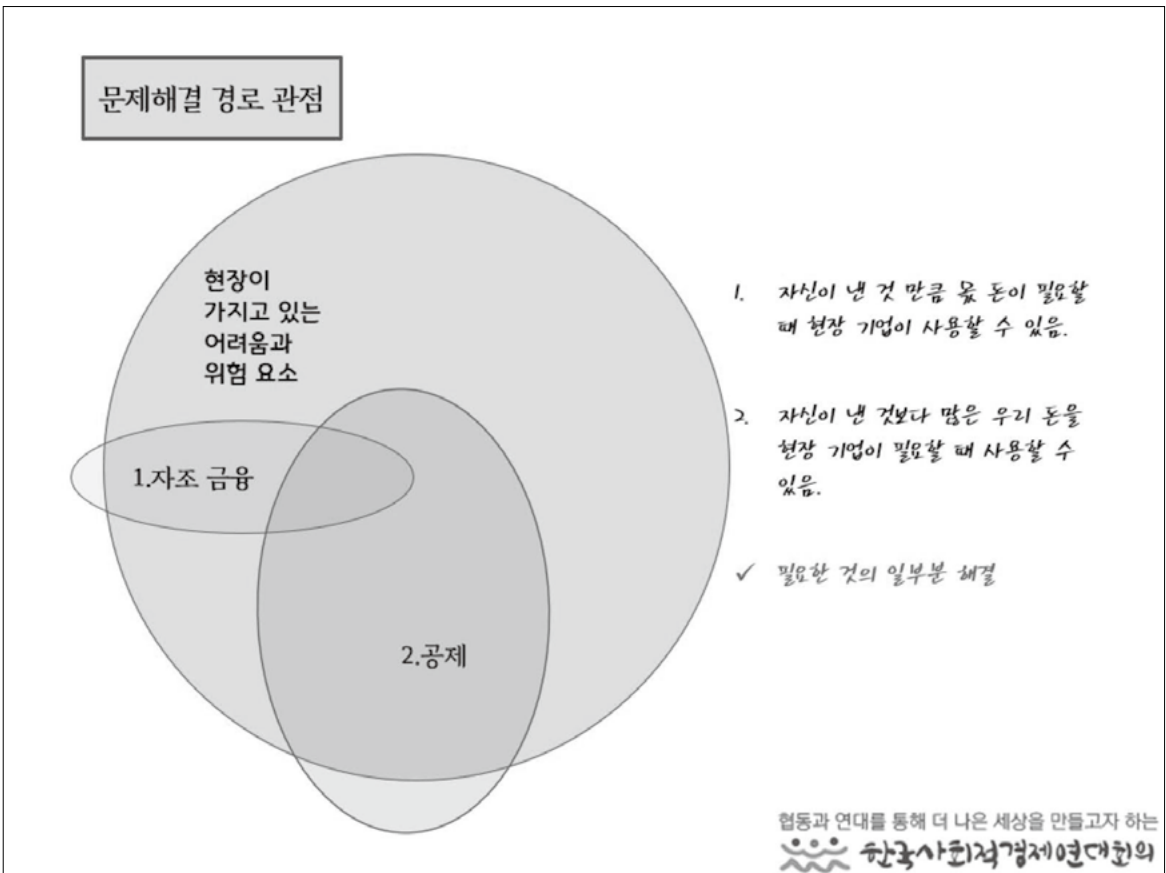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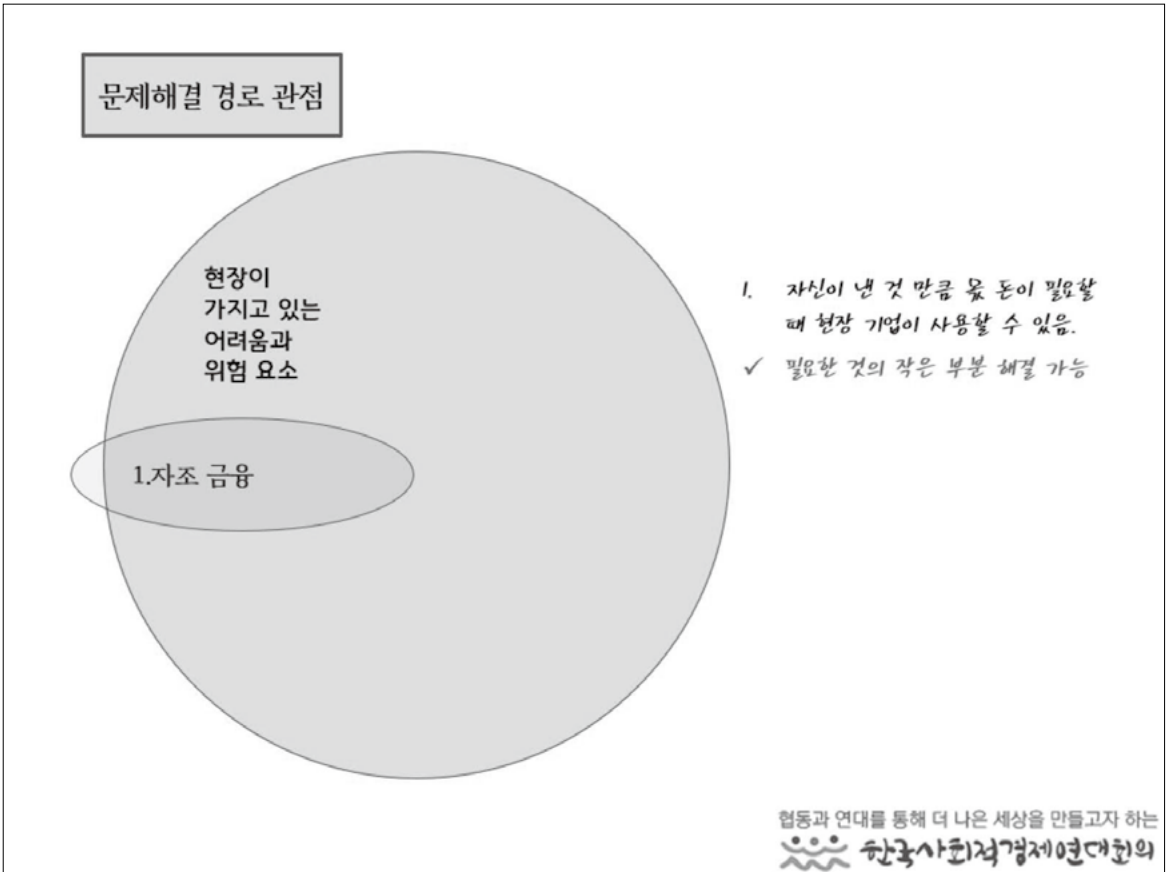
- a. 정부지원 외 공제, 대자본 지원 가능
- b. 사회적은행 외 신협, 일반금융 활용
- c. 신협 외 복지, 사회적은행 활용
- d. 8가지 지원이 가능...
- e.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 역량이 커지길

금융 주체의 다양화 및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주체 별  
금융 확보 규모는 확대되도록  
상호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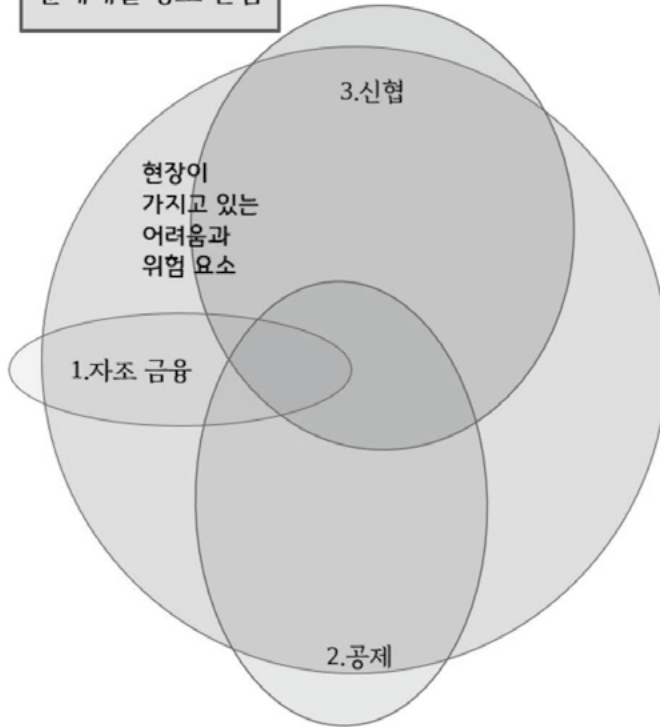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우리 스스로의 문제해결  
경로 관점


❖ 본 자료에 제시한 도식은 개념도가 아니며, 단순한 논리 전개를  
위하여 토론자 개인이 임의로 그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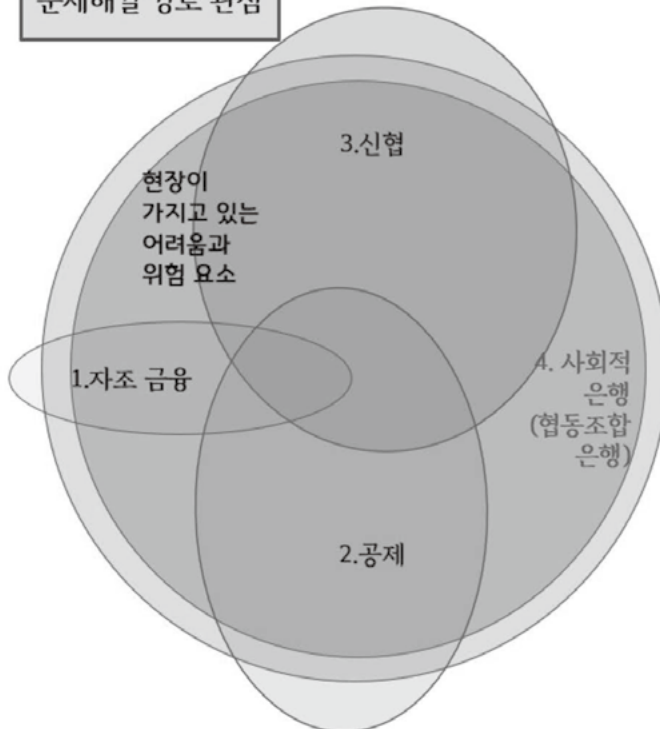
문제해결 경로 관점



1. 자신이 낸 것 만큼 몫 돈이 필요할 때 현장 기업이 사용할 수 있음.
  2.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은 우리 돈을 현장 기업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음.
  3. 다수의 개인들이 돈을 모아 수신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 금융 상품을 현장 기업이 활용할 수 있음.
- ✓ 필요한 것의 많은 부분 해결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문제해결 경로 관점



1. 자신이 낸 것 만큼 몫 돈이 필요할 때 현장 기업이 사용할 수 있음.
2.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은 우리 돈을 현장 기업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음.
3. 다수의 개인들이 돈을 모아 수신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 금융 상품을 현장 기업이 활용할 수 있음.
4. 다수의 현장 조직들이 돈을 모아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육성

사회적경제 현장의 필요와 욕구 &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노력에 사회적 은행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추가 할 때라 생각함.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사회적 가치 투자 리스크에 대한 관점

기존 은행들에게 사회적 금융<sup>1)</sup>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사회적가치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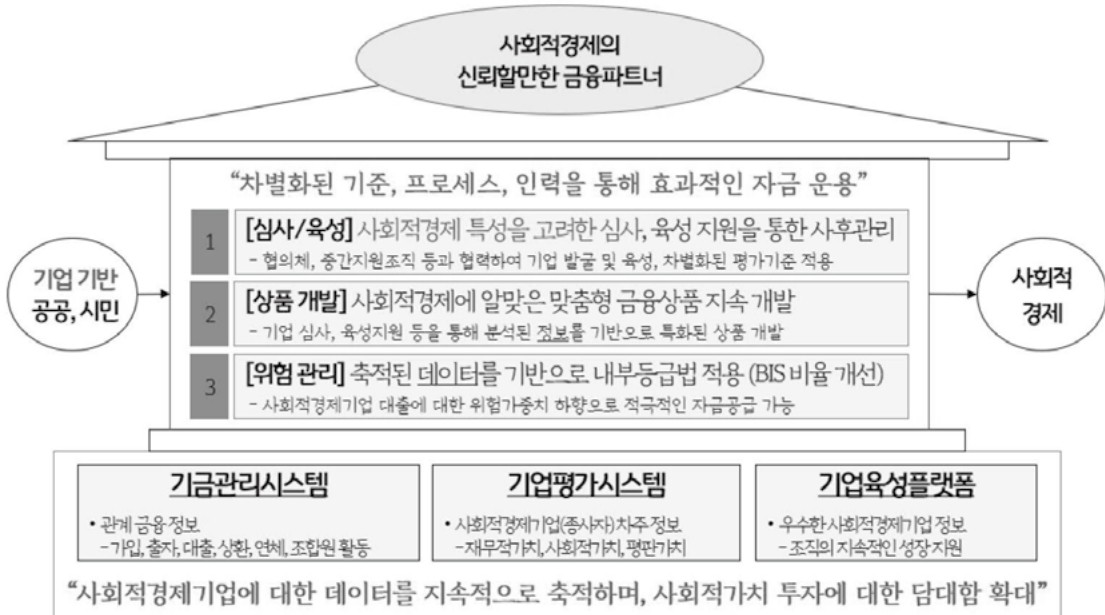
- 13개 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액(18~19)은 1조 1,823억원이나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 집행 /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규모가 큰 사회적경제기업 위주로 운영
-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나 인센티브가 부족함  
 - 검증된 평가모형 부재, 전문인력 부재, 일선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No	회사명	사회적경제 관심도(B/A)	총자산(억원 A)	사회적경제 자금공급(억원)		
				전체(B)	18년	19년
1	기업은행	0.097%	3,445,583	3,341	881	2,460
2	광주은행	0.081%	275,953	225	141	83
3	수협	0.057%	476,270	273	13	259
4	농협	0.053%	3,322,059	1,765	355	1,409
5	대구은행	0.051%	632,222	321	52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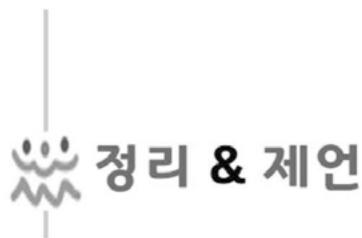
- 비가시적 장기적인 '사회적가치' 투자가 가능한 담대한 의사결정구조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해 보임
  -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담대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사회적은행 필요
- ❖ 본 자료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인용하여 개인 의견을 추가한 것임.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금융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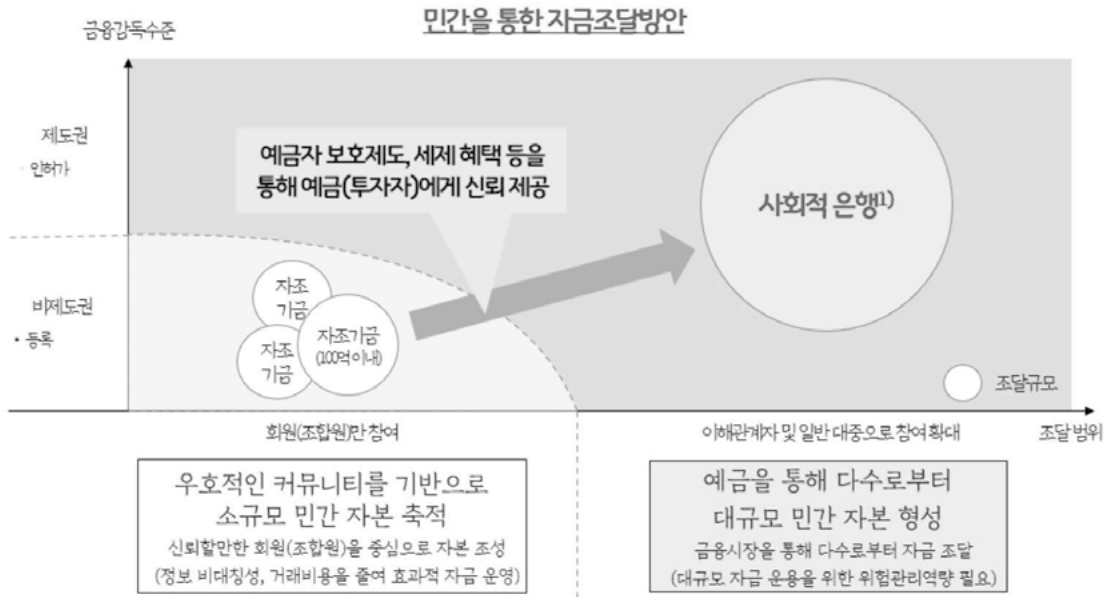


❖ 본 자료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인용하여 개인 의견을 추가한 것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성장을 스스로 적극 견인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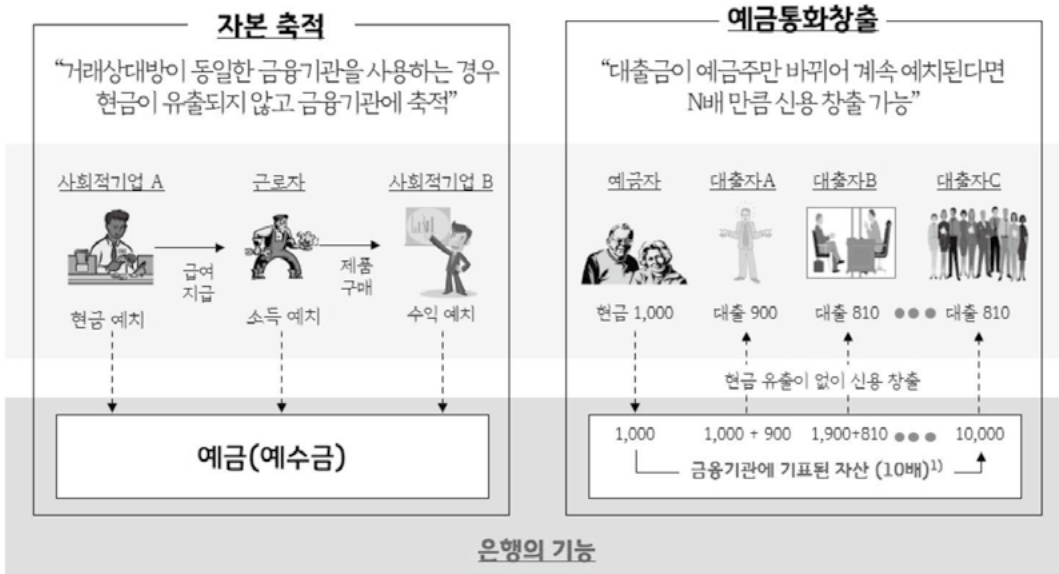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주로 예금을 받고,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가치가 우수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용자하는 은행으로 정의

❖ 본 자료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인용하여 개인 의견을 추가한 것임.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설립한다면**

**사회적경제 내 자본 축적이 용이하고, 자금 공급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주 1) 고객 계좌의 저축한 금액이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만큼 시장으로 돈이 풀리게 되는 것을 예금통화를 창출한다고 표현하며 본 예시에서는 90%만 대출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가정(지급준비율 10%)

❖ 본 자료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인용하여 개인 의견을 추가한 것임.

- 사회적경제 현장이 협동금융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 사회적경제 다운 도전-비가시적/장기적 사회적가치-에 담대하게 스스로 지원하여
- 사람중심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 Q & A

고맙습니다





#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과제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과제: - 지방정부 기금을 중심으로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김영식

### I. 지방정부와 사회적 금융

#### 1. 배경

- 민선 5기 이후 일부 선도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주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이 주요과제인 지방정부에게 사회적 경제는 정책수행 방식으로서 잠재력 높음
  -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는 사회적 금융이 필수
  -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과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지역단위의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 증대
  
- 세계적으로 상호금융조직은 지역공동체금융으로서 사회적 금융의 핵심으로서 기능
  -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 과정에서 신용협동조합, 상호공제조직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반면 국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금융 부문) 등 상호금융조직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금융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약한 상황
  - ‘지역주민의 돈’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상호금융조직 자체의 노력 부족,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일반 금융기관과 차별성없게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
  -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 사회적 경제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 제공과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을 시도
  -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금융 프로그램, 정책과 별개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기금설치 등의 사례가 등장
  -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추진 (예: 화성, 성동, 성북 등)

## 2.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 기금(사회투자기금) 조성 추진현황 (2020)

○ 조례 제정 : 12개 광역, 41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적 경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광역 기금 조례 : 6개 지자체, 사회적 경제 조례 내 근거 마련 5개 지자체
- 기초 기금 조례 : 2개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례 내 근거 마련 39개 지자체

구분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비고
사회적 경제 기금 조례 별도 제정	6	2	(광역) 서울, 경기, 충남, 세종, 전북, 경남 (기초) 서울-성동, 경기-화성
사회적 경제 조례 내 기금설치 근거 마련	5	39	(광역) 충북, 전남, 광주, 대구, 울산 (기초) 서울-성북, 서울-은평, 서울-강동, 경기-성남, 전북-전주, 전북-완주 등
소계	11	41	

○ 기금 설치: 6개 광역 지자체, 6개 기초 지자체에 사회적 경제 기금 설치

구분	구분	기금명	설치년도	기금규모*	비고
광역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012	880억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2016	250억	
	세종시	사회투자기금	2018	10억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2019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2020	-	5년간 60억 조성 예정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2020	-	5년간 150억 조성 예정
기초	서울 성동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4	7.5억	
	서울 성북	사회투자기금	2015	14억	
	서울 은평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36.5억	
	서울 강동	사회적경제투자기금	2016	3억	
	경기 성남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0	20억	
	경기 화성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4	600억	
	전북 완주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1	11억	
	전북 전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9	8억	

\* 2020년말 지자체 전입액 기준 / 출처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0)

\*\*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민간자금과 혼합되어 현장에 공급

---

## II.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의 제도기반 강화

### 1. 지역기금 조성의 법적 걸림돌 제거

- 최근 지방정부의 지역기금 설립 추진은 기본적으로
  - 지방정부 단독출연 또는 민간기관의 출자와 매칭하거나,
  -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위탁 추진 등을 중심으로 계획
  
- 그동안 지방정부의 지역기금 설립에는 법적 걸림돌이 존재
  - 2015년 행정자치부 주도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기금관리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시행
  - 제6조의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은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토록 함 (민간위탁 금지)
  - 원활한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여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중앙정부, 국회에 요청
  
- 최근 기금관리법이 개정되어 공포됨. (김영배 의원 발의, 2021.1.5. 공포)
  - 지방기금 관리·운용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 (아래 비교표 참고)
  - 2021.4.6.부터 시행 예정
  -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위탁 요건과 기간을 규정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기금을 운용할 기관을 선정하는데 자율성이 강조되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 할 때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기금운용에 적합한 재무상태와 건전성,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개정내용 비교표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 이전 법 조문	개정된 법 조문
<p>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2. 지방정부 지역기금 조성 및 운영상의 과제

- 지역기금 운영 사례에서 몇 가지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
  - 1)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역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지역기금 (지역 사회적 경제 기금,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 재원 확보에 한계
    - 조성 추진 과정에서 기금 규모 축소 등이 빈번하고, 개별기금으로 필요한 수요를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
  - 2) ‘아직도’ 원금보전을 전제로 기금을 운용
    - 단순용자 중심의 사업에만 몰두하는 결과 초래
    - 기금의 보수적 운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 일반금융 기관과 큰 차이없이 담보제공 등의 조건 요구
      - 용자의 경우도 상환기간 등이 일반용자상품과 큰 차이 없는 경우가 발생

### 3) 전문성있는 기금운영 주체의 부족

- 실제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 투자경험이 있는 기금운영 민간주체가 소수
- 특히 지방에서는 기금의 운영경험 있는 민간주체가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

### 4) 기금 사용처에 대한 민간(사회적 경제계)과 자치단체간 이견 발생

- 행정은 사회목적 투자 전반에 대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대체로 희망
- 민간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금수요에 대한 대응을 기대

### 5) 기금조성과 운영의 세부사항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왕왕 발생(악마는 디테일에!)

⇒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는) ‘동상이몽’ 을 벗어나야 함.

## III. 지방정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금융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자원이 확보되어온 것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임.
- 지방정부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 이 있음.

### 1. 중앙정부의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출연)이 필수

- 지방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규모는 아직 작은 편
- 각 지역에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며,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필요로 함.
- 따라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에서 공표되었듯이, 중앙정부가 사회적 금융의 핵심기반 중 하나로 조성하기로 한 사회적 경제 기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함.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중앙정부는 기금 관련 조항포함에 대해 미온적
  -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의 방향을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한다면 기금 조

---

성에 소극적인 것은 년센스임.

- 사회적 금융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기금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

## 2. 지방정부의 기금운용에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의 협력이 필수

- 지방정부가 사회적 경제 기금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단순한 ‘자금의 운용’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생존’
-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의 공급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션이 필요
- 역량의 편차는 있으나 그동안 현장에서 활동해 온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은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사회적 금융에 협조적인 일반 금융기관이나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호금융조직 중 대다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육성 차원 경험이 부족
  - 금융투자자로서는 경험이 풍부하나, 사업의 파트너로서 ‘조직을 함께 키워본’ 경험이 대부분 없기 때문
- 최근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을 발표한 지자체 중 일부는 기금 운용을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발생
  - ‘금융전문성’이라는 기준에 따른 손쉬운 선택일 수는 있으나 원래 기금 조성의 목적을 감안하면 적절한지 의문
- 따라서 지방정부의 기금운용을 민간 전문기관에 맡길 때, 사회적 금융에 특화된 중개기관들과의 협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3. 지방정부에 대한 사회적 금융 기관의 적극적 사업발굴과 제안이 필수

- 지방정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회적 금융을 연계하기를 희망
  - 넓게 보면 공공이 하는 상당수의 영역과 사회적 금융이 연계 가능



- 
-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기금 운용은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
    - 지방정부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업을 사회적 금융과 연계할 수 있음.
  
  - 한국판 뉴딜 등 지방정부가 고민하고 참여하는 여러 사업에 사회적 금융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
    - 예: 향후 몇 년 동안 한국판 뉴딜 관련 자본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지방정부도 기금 외의 다른 자원/재원을 주민의 복리를 위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임.
    - 예) 성동구가 조성한 ‘엑스트라마일 펀드’
    -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사회적 금융 기관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

## 토론문 - 도현명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진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사회적금융팀장**

- 2008년부터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 이야기를 하며 활동해 온 구성원으로서, 최근 3년간 빠르게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 다만 규모 외에도 이제는 신경써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존재.
  - 공공의 자원이 마중물이 되는 것은 맞겠으나 결국 민간 재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예를 들어서 재단들이 5% 이상 투자하기 어렵다거나, 명확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금을 기부 처리한다거나 하는 방식. 민간 LP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또한 현재 공공을 통해 제공된 기금들의 결과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발제에서 나온 평가는 돈을 집행하기 위한 자격평가에 가까움. 임팩트 펀드가 투자한 대상이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할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공공 재원이 사용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놓고 있는지 검토하고 더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임팩트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투자 비율이 8% 수준에 그침. 대부분 용자나 프로젝트 투자 등의 방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잘 신경쓰지 않고 있음.
  - 다른 한가지는 생태계에 비어 있는 사회적 경제 전문 금융기관에 대한 논의인데, 이는 뒤의 박종현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상술하겠음.

**발표자: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다양성, 그리고 목적이 다른 금융들이 있다는 말씀에 매우 공감함. 이제 생태계가 제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이런 고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함.
- 대표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매우 부족함. 현재 임팩트 액셀러레이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펀드가 성장금융이나 한국벤처투자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있음. 그렇다고 일반 벤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는 민간/공공의 사업이 많지도 않음. 중간에서

---

성장을 촉진하는 부분이 약함.

- 더불어 지역에는 어떤 종류이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금융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 조직과 인원이 매우 희소함.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가 지역 불균형이고, 지역에도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할 주체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들을 위한 금융기관은 지역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지금 상태에서 생태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과도한 부처간 중복지원 또는 직접지원을 점차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사회적 금융 제도 개선 과제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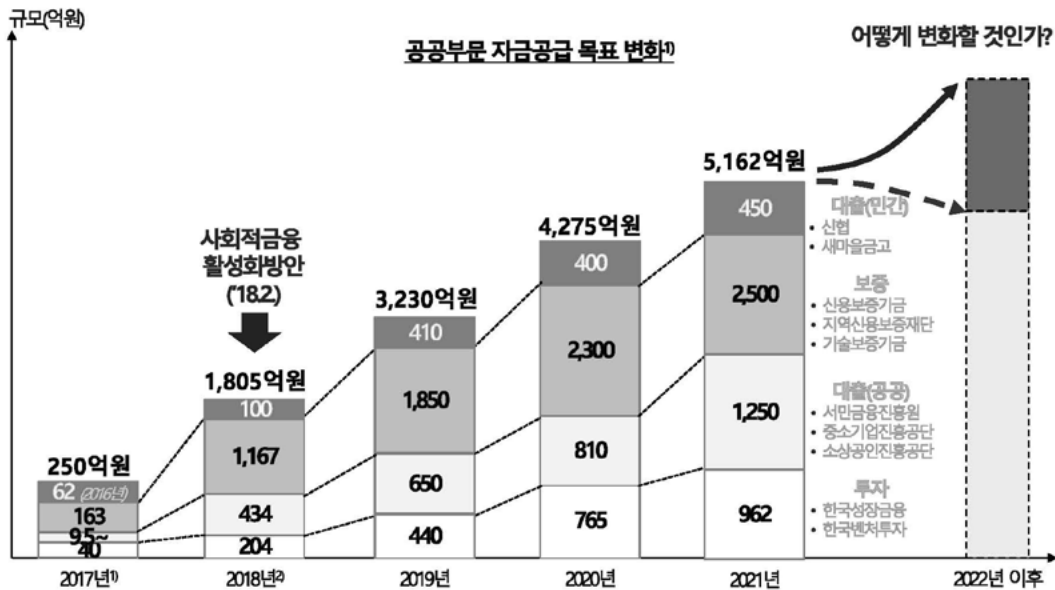
# 사회적 금융 제도 개선 과제

2021.2.18.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 이상진

1. 향후 사회적 금융의 과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 3년 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자금공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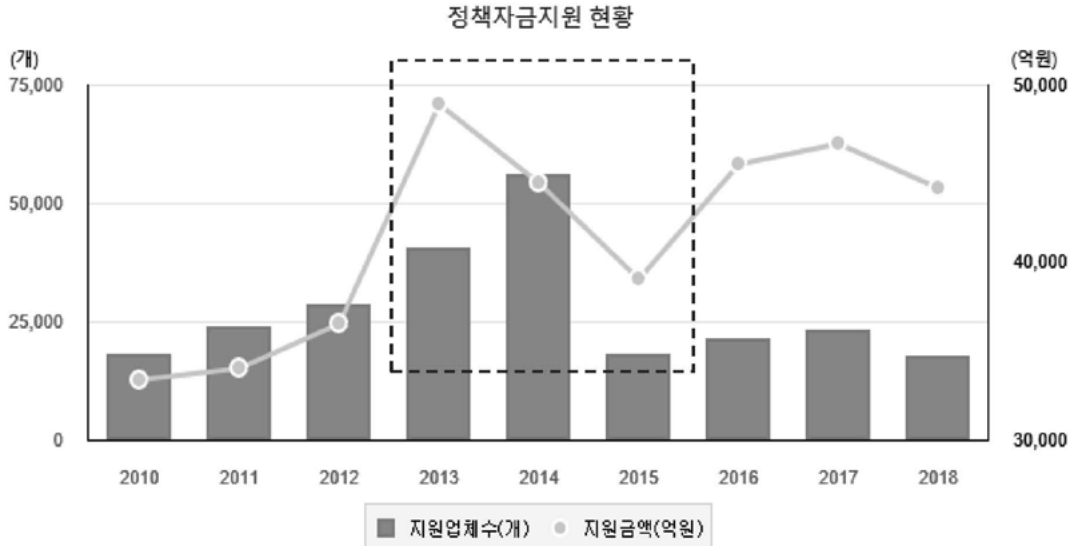


주 1)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2018-2021년)

2)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 추정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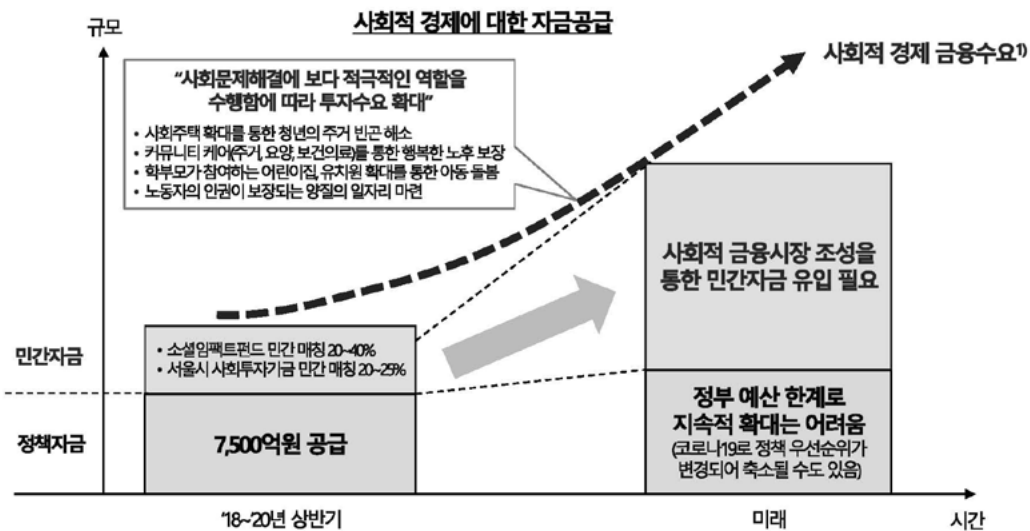
3) 18년 11월까지 집행실적(목표는 1000억원)

하지만 정책자금은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정책자금공급(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전액(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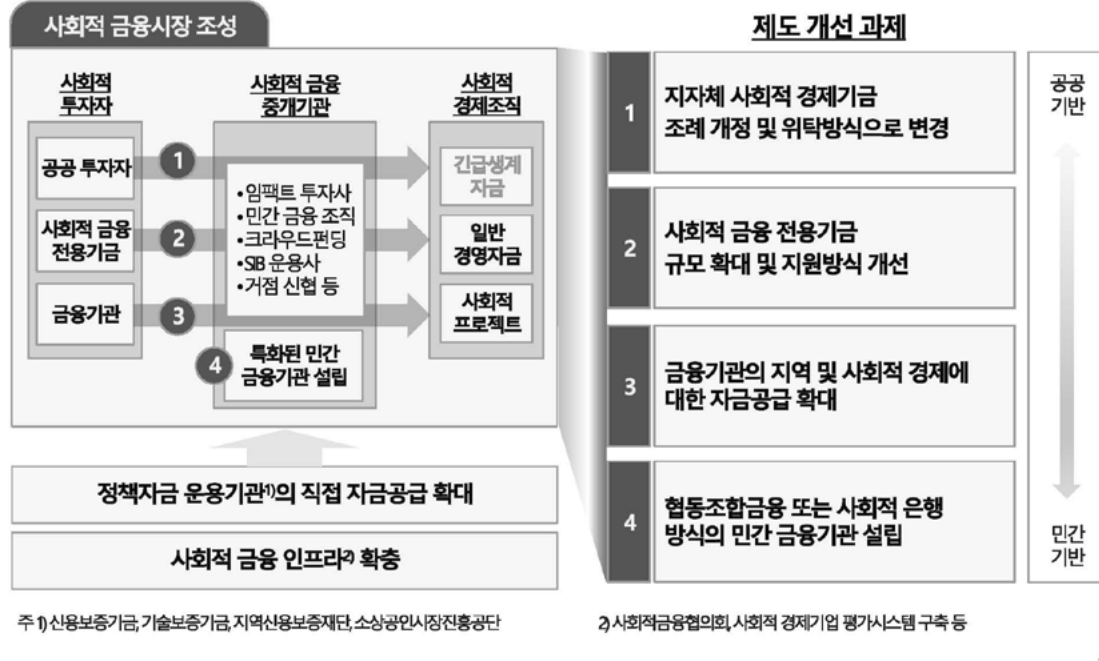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 1)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비중은 1.4%로 EU 평균의 6.9%의 22% 수준이며, 사회적가치 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EU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는 전체 노동인구 중 사회적경제에 노동인구 비율이 9%를 상회함(15)



##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4

## 조례 개정, 위탁 방식 변경을 통해 민간에게 대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 조례 개정을 통한 민간의 대손 부담 완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원한다.<sup>2)</sup>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 위탁방식을 통한 민간 대손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중에서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구분	지역	명칭	조성년도	조성액	조례 개정	현황
광역	서울	사회투자기금	2012	880억원	X	민간 수행기관에 대여 대손 책임을 민간에 전가
	경기	사회적경제기금	2016	250억원	X	신탁에 대여 대손 책임을 민간에 전가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2020	20억원(3년)	O	민간 수행기관에 대여 대손 공동 부담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2021	60억원(5년)	O	민간 수행기관에 대여 대손 공동 부담
기초	성북	사회투자기금	2015	14억원	X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심사 위탁
	성동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4	75억원	X	민간 수행기관에 대여 대손 책임을 민간에 전가
	화성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4	629억원	X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심사 위탁
	전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20	8억원	X	민간 수행기관에 대여 대손 공동 부담

주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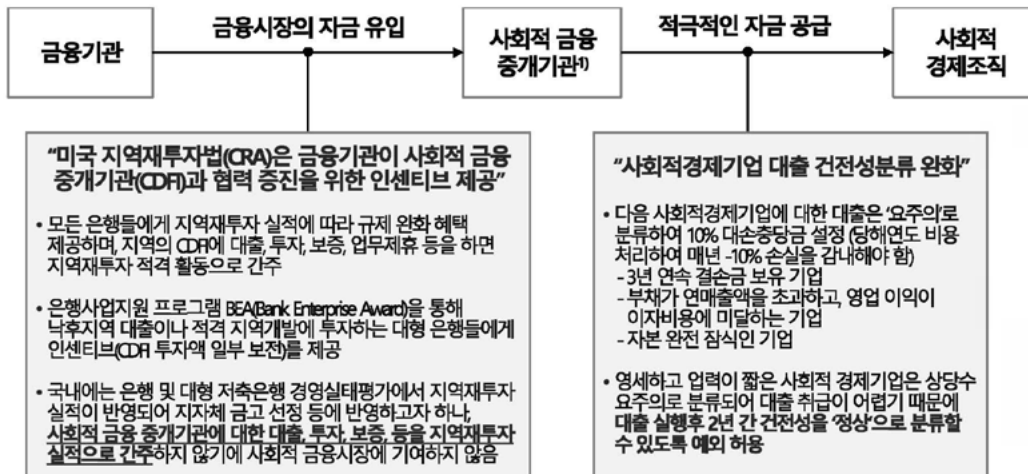
5

## 사회적 금융 전용기금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시장의 조성자로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구분	벤치마킹 사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현황	개선방향
<b>도매기금 (CDF Fund)</b>	<p>“1996~2016년까지 자금공급 실적 2조 4천억원 이상(연간 1,200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개발금융기관법(1994년)에 따라 설립된 미국 재무부 기금(초기 10억불, 1.1조원)으로 인종·받은 CDF 기관을 선별해 매년 기금 배분하여 시장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기금을 통해 보상하고자 함</li> </ul>	<p>“2019~2020년까지 194억원 공급 (연간 100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도매기금으로 2019년 설립</li> <li>5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자 했으나 조달 실적은 ¼ 수준</li> </ul>	<p><b>사회적 금융 전용기금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 확보 필요</li> <li>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공공, 민간으로부터 기금 확대 필요</li> </ul>
<b>소매기관 육성 (CDF 프로그램)</b>	<p>“지원금으로 마중물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지원금(FA): 매년 CDF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수령하여 기관당 22~55억원의 지원금 제공, 이를 기반으로 자기자본으로 확충해 신규 대출·대손충당금으로 활용</li> <li>기술지원금(TA): 급여나 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하며 기관당 평균 11억원을 지급하고 있음</li> </ul>	<p>“대출 또는 투자로 자원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족한 투자금 또는 대출 자원을 공급하고, 후순위 투자자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나, 기금 운영을 위한 충분한 운영비를 제공하지 못함</li> <li>신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설립 사례는 1건으로 시장 조성자로서 기능은 한계가 있음</li> </ul>	<p><b>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적극 지원</li> <li>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li> </ul>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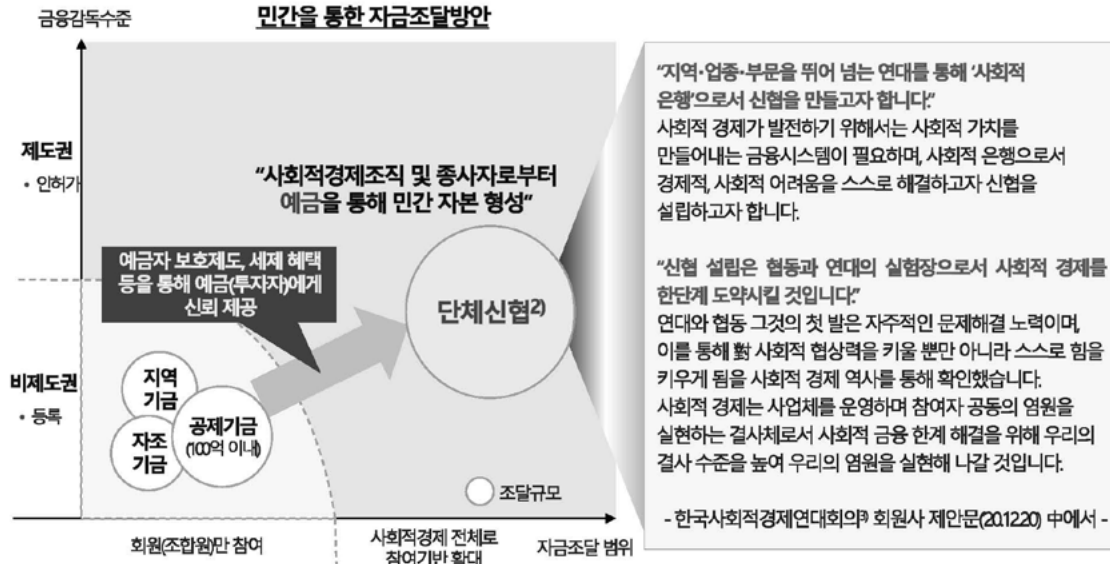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주 1) 미국 CDF가 재무부가 운영중인 CDF Fund로부터 인종을 받고 은행 및 펀드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듯이, 국내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 협력 등을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단체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18년 발표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언급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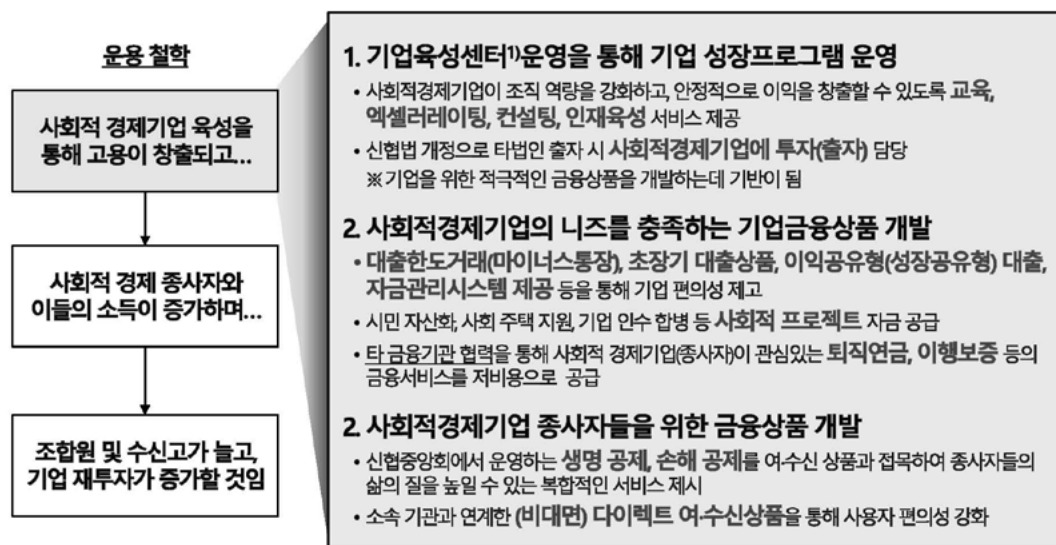
7

## 사회적 경제가 연대와 협동을 통해 금융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스스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sup>1)</sup>합니다.



주 1) 적정신협은 강원랜드 신협(03) 국방부 신협(14)에 인가된 사례가 있으나, 단체신협은 1997년 지역신협은 1999년 이후 신규 인가된 사례가 없었음  
2) 지난 12월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단법인을 공동유대법위로 하는 단체신협 설립을 검토 중 (홈페이지: <http://cu.ksenet.org>)  
3) 사회적 경제의 부문지역업종협의회를 아우르는 전국 네트워크로 2011년 만들어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2007년 발족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되어 2012년 창립 (20년 10월 사단법인으로 전환 상임대표 유영우) 홈페이지: <http://www.ksenet.org>

##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단체신협은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기존 신협과 달리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 1) 몬드라곤 노동인민금고의 기업국 역할

# 도매기금과 사회적 금융 생태계

**박학양**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 1 |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의 유용성

## 1 | 우리나라 사회적금융 현황과 평가

- 시장규모, 재무성과 취약 등으로 자금공급이 부족한 수요초과 시장
  - 작은 시장규모와 우량기업 부족으로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 부족
  - 수요 대비 부족한 자금을 민간 사회적금융 증개기관과 소규모 자조기금이 금융 수요를 보완하는 관계형 금융시장

<주요 경제지표 사회적경제 비중>

	전체(A)	사회적경제(B)	비중(B/A, %)
업체수(중소기업, 천개) ('18년)	6,639	19	0.29
종사자수(중소기업, 천명) ('18년)	17,104	112	0.65
대출금액(중소기업, 억원) ('19년)	7,167,000	8,498	0.12

※ 사회적 금융 대출규모 : ('17년) 2,527억원 ('18년) 5,374억원  
('19년) 8,498억원 ('20년 9월말) 1조 649억원

-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금융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공급자 중심 금융시장
  - 금융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시장실패 영역으로 정부의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공급자(정부) 중심 시장
  - 부족한 자금을 보조금, 지원금으로 보완하는 불완전 금융시장
  - 공급자 시장 특성상 금융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과 금융 접근성 미흡
- 사회적 가치로 재무적 성과를 보완하는 융합가치 금융시장
  - 미흡한 재무성과를 사회적가치로 보완하는 가치지향 금융
  - 사회적가치 평가 모델이 기관마다 상이하여 평가결과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이해 확산과 신뢰 확보에 한계
  - 공공(신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가치 평가 시스템 범용화 노력 시작단계

### 요 약

- ✓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은 최근 3년간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으나 주로 정책금융 확대가 주요인이며 민간금융 유입은 여전히 미흡함
- ✓ 정책금융 의존도 높을 경우 정책변화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재무적 이익을 대체하는 사회적가치 평가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

## 2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의 유용성

- 안정적인 사회적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효과 기대
  - 정부, 공공부문을 통한 상시적인 재원조성 경로 확보(출연, 출자)
  -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재원확보(출연, 출자)
  - ESG, 사회가치경영에 동의하는 민간기업과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출연, 기부)
-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전략 수립(Hub&Spoke)
  - 사회적경제 분야 정기적인 자금수요 조사 및 분석
  - 수요조사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관리로 자원 배분의 효과성 제고
  - 정책금융과의 중복은 피하고 민간금융과는 협력을 통한 승수효과 확대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협력 강화로 다양한 사회적금융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금수요에 따라 최적의 중개기관과 연계한 금융지원  
→ 금융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 다양한 자금수요를 고려한 금융상품 구조화 협업 강화
  - 창업/성장/재기지원 등 기업 성장단계별 전문 중개기관 발굴·육성
  - 기업금융/프로젝트 금융 등 자금특성별 전문 중개기관 발굴·육성
  - 사회적금융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공동 운영
- 사회가치 평가시스템 고도화와 국민 인식확산 노력의 구심점
  - 사회적금융 데이터 축적과 연구/분석, 사회가치 평가모델 공동구축과 시스템 고도화, 표준화 추진
  - 사회가치 평가결과 공유와 성과보고 등 인식확산과 신뢰 확보 노력 강화

### 요 약

- ✓ 도매기금은 사회적금융의 컨트롤 타워로서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에 기여
  - 안정적이고 충분한 기금 조성 역할(사회적금융의 Hub 역할)
  -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수요자 중심의 금융상품 설계
  - 다양한 중개기관 발굴/육성으로 수요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 사회가치 평가 시스템 고도화/사회가치에 대한 인식확산과 신뢰 확보

## ①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출범

-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2.8.)중 관련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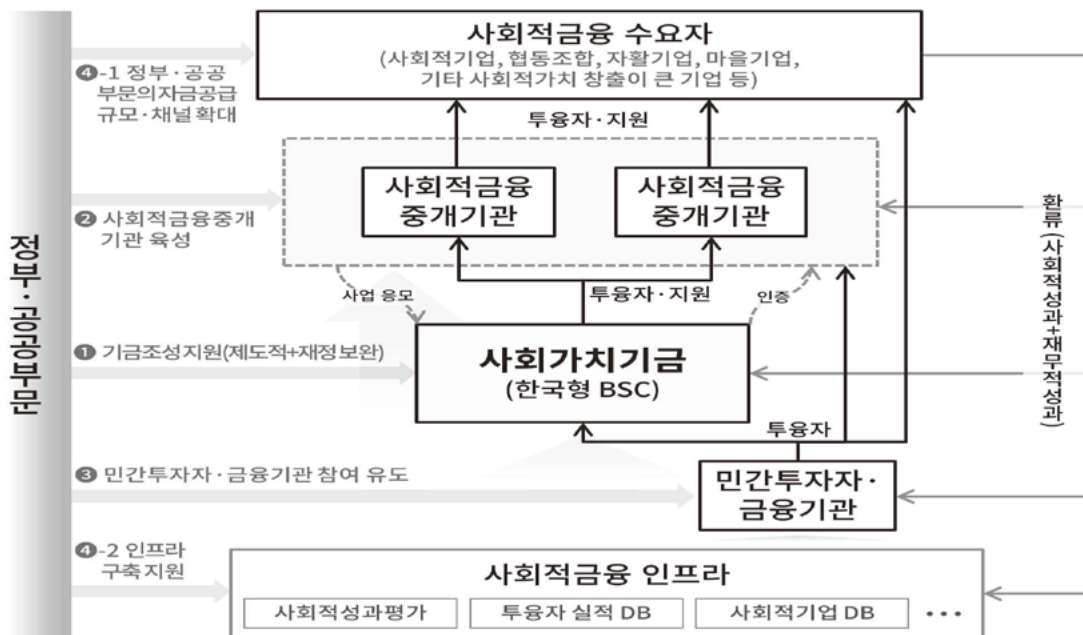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민간기금 설립 추진
  - 기금 운영주체는 출자·대출·출연·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채택
-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등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규모·자금수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년간 3천억 규모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재정 보완을 지원
  -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에 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도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추진
  - 정부·지자체 등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금융 관련 기존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사회가치기금에 이양 추진
- 사회가치기금은 금융중개기관의 사회적금융 지원경험·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 인증대상은 사회적금융을 주로 수행하는 중개기관뿐 아니라 사회적 금융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도 포함
  - 인증요건은 법적형태, 소유구조, 사회적금융 경험·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주요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설립준비	2018. 2. 23 ~ 2018. 12. (설립추진단 운영)
설립일	2019. 1. 23 (비영리 재단법인)
감독부처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사회적금융(투자, 융자, 보증 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
이사회	7인(금융전문가, 당사자조직, 출연기관, 지자체 등)
내부통제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출연금	281억원(출연자 : 사회적경제, 공공, 신협, 17개 시중은행)

<참고>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주요 업무흐름/관계도





## ② 설립후 현재까지 운영성과

- (기금조성) 사회적경제 및 금융권 등 총 281억원의 기금을 조성
  - 기본재산 5억원, 보통재산 276억원
- (자금공급) 설립후 2020년 말까지 총 194억원의 투융자 집행(약정기준)
  - SVS 자금공급을 통해 총 1,015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5.2배 승수효과
    - 기업금융에 141억원(72%), 프로젝트 금융에 53억원(28%) 공급
    - 투자(출자) 107.3억원(55%), 대출(융자) 86.6억원(45%)을 집행
  - 각종 금융지원 사업에 총 20개 중개기관이 참여하여 도매기금 역할 수행

<설립후 금융지원사업 현황>

구 분	SVS약정 (억원)	총조성액 (억원)	승수효과 (배)	참여 중개기관	업체수
■ 임팩트펀드 출자사업	94	788	8.4	9	63
■ 사회목적 프로젝트	53	179	3.4	5	17
■ 중개기관 용자사업	47	47	1.0	4	72
■ 중개기관 운영자금	0.6	1	1.7	2	2
계	194	1,015	5.2	20	154

(주) 업체수는 '20.12월말 기준 중개기관별 영업 및 실적보고 등 데이터 참조

## ③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 (기금조성) 당초 5년간 3,000억원 기금 조성계획 감안시 성과 부진
  - 사업초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기금조성으로 적극적인 사업수행에 한계
    - 조성계획 대비 연간 평균액 기준으로 2020년말까지 1,200억이 조성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281억원 수준으로 극히 부진
  -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민간 출연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 출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사업집행) 설립초기 조성된 재원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사업구조 조기정착과 성공사례 창출에 집중
  - 다양한 사업모델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조화하여 공급
  - 사회적금융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금융 활성화에 역점
  - 펀드출자 94억원중 68%인 64억원이 모태펀드, 성장금융 펀드 출자 참여
    -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펀드조성 및 운영기관 선정에 한계

## 4 주요사례

- ① 임팩트펀드 출자(기업금융)** (94억) **D3, 아크임팩트, BPP의**
  - 모태펀드와 성장금융의 임팩트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64억)
  - SVS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임팩트 펀드(사회혁신기술)에 출자(27.5억)
    -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인내자본 조달 지원
- ②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기업금융)** (44억) **신나는조합, 밴드, 주민연합회**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기업대출 매칭융자
    - 사회적금융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존 중개기관과 협력사업
    -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기관의 다양한 경쟁력을 고려하여 역할분담
- ③ 공장지붕 태양광 에너지 사업** (5억) **SVS, D3, 아크임팩트**
  - 태양광 사업 지주회사(한국지붕태양광지주(주))에 출자(총 출자금 35.6억)
    - 민간자본 참여 유인,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확산
    - 안정적인 기대 수익률과 기후환경 변화 대응 등 사회적 가치 동시 추구
- ④ 지역자산화 브릿지자금 지원** (4.3억) **비플러스의**
  - P2P 협력 건맥1897 협동조합(목포) 지원(주민 등 100명이 조합원으로 출자)
  - 안산 및 전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원(지역의료돌봄 커뮤니티 확장)
- ⑤ 사회성과보상사업(SIB)** (11억) **팬임팩트코리아**
  - 청년실업 해소(서울시), 치매예방(부여군) SIB사업에 매칭출자
- ⑥ 지역중개기관 설립 지원** (2.5억)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 경남지역 중개기관 설립 지원(출자 10백만원), 융자자금 매칭(2.5억원)
    - 설립 준비단계부터 시장분석, 법적형태, 지배구조 등을 컨설팅 지원
- ⑦ 지역 임팩트펀드 결성 지원** (3억) **MYSC, 소풍벤처스**
  - 경남 지역 청년 및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남 청년임팩트 투자펀드」  
규제자유특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강원피크닉투자조합」에 출자
- ⑧ 노동공제연합 설립/사업 지원** (29억) **봉제인공제회외 15개조직**
  - 불안정고용 노동자(프리랜서,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등)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조기반 노동공제회 설립 지원
    - 총 15개 조직이 참여하는 노동공제연합(풀빵) 설립을 지원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연계한 소액 대출사업 자금 매칭(24억원)

### ① 재원조성의 안정성 확보와 규모화 추진

- 계획한 규모의 기금 조성시까지 민간의 기금출연 확대방안과 정부출연 방안을 동시에 추진
  -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시 정부/민간의 출연여건이 개선될 전망
  - 정부의 적극적인 출연의지가 민간의 추가출연 유인에 기여
- 서민금융법 개정, 지방기금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적인 출연/출자 기반 확보가 도매기금 지속가능성에 중요
  - 미소금융 재원을 도매기금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서민금융법)
  - 모태펀드 중 사회적경제 관련 펀드운영을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이관 추진
- 민간(영리), 사회적경제(당사자), 시민의 투자/출연으로 확대 추진
  - 다만, 기존의 자생적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재원조성 기반은 온전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간섭과 침해가 없도록 관계정립

### ②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육성과 협력강화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사회적금융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 기업의 성장단계별, 금융상품별 입체적인 금융서비스망 구축
  - 기존 중개기관의 사업범위 확대, 복합금융상품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 지역별 중개기관 설립준비/인큐베이팅/육성등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 사회적금융 생태계 확충을 위한 도매기금/중개기관간 협력사업 활성화
  - 정기적인 사회적금융 수요조사/분석 실시(사회적금융포럼 활용)
  -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상품 공동개발
  - 사회적금융 전문가 양성, 공동 업무메뉴얼 제작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인증제도」 단계적 도입 추진
  - 도매기금, 중개기관, 전문가와 공동으로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 일정기간(2~3년) 가이드라인과 중개기관 사업성과의 정합성 검증
  - 연구용역을 통해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정책당국과 협의후 확정

### ③ 사회적가치 인식 확산과 평가시스템 고도화

- 사회적가치 평가의 신뢰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고도화
  -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분석
  - 지원시점의 사회적가치 평가와 지원후 사회적가치 성과의 연계성을 분석
  - 평가시스템의 공동사용을 통한 비교가능성과 범용성 제고
  
- 사회적가치 평가 결과의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유방안 수립
  - 사회적가치평가 공동 성과공유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자와 정보공유 확대
  - 사회적금융의 사회적가치 창출효과, 상환율 등 사회적금융의 효과성 입증
  - 출연자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심리적 보상과 추가출연 인식 강화 및 사회적가치에 관심있는 신규 출연자 발굴에 활용

### ④ 민간영역과의 협업/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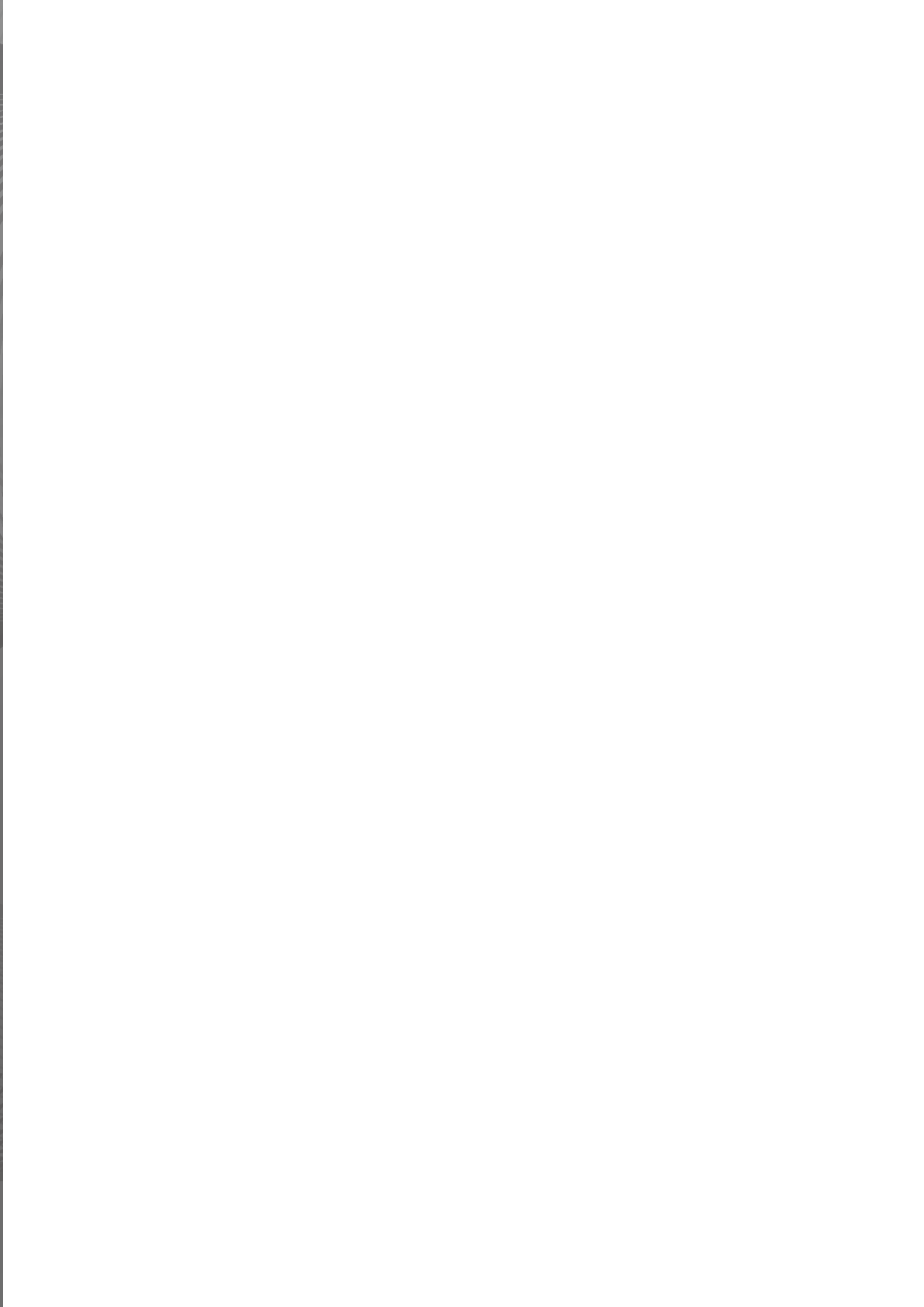
- 사회적가치가 기업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수용되는 추세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전략, ESG경영 등 사회적가치를 핵심 경영 전략으로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Global Trend)
  - 기업의 사회적가치 경영전략과 사회적금융을 연계하는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구체적 실행전략을 수립 (ESG 펀드 조성/운영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대응전략 수립
  -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효과적인 분야에 대한 시장진출 기회를 포착하고 민간과 협업을 통한 성장기반 확대
  - 불평등/고령화/양극화/기후환경 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 공공, 사회적경제 분야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 활성화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 평가와 과제 토론회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장  
민병덕 국회의원

**SVIS** 한국사회투자연대기금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